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2016년 03월 18일 초판 1쇄 인쇄
2016년 03월 18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새누리당
펴낸이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펴낸곳 | Jammy (재미)
디자인 | Jammy

출판등록 | 제2012-000107호(2012. 11. 29)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5길 14, 나동 222
전 화 | 02-323-9625
팩 스 | 02-323-9626
이 메 일 | kimunee12@naver.com

ISBN 978-89-969829-1-3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품은 약속의 길!
새누리당이 실천의 길로
만들겠습니다

창조와 변화를 향해 달려온 맘과 열정의 시간,
그 중심엔 항상 국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약속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으로 살아온 것을 알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길을 찾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힘껏 힘을 내봅니다.

초심의 열정 그대로 마음을 담은 약속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국민을 위해, 희망을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 3월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3대 분야
20대 실천공약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

- | **내수산업 살리기** |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 **미래성장동력 육성** | 대한민국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줄 미래가치를 만들어갑니다.
- | **니들경제 활성화** | 나눔과 공유로 경제에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

- | **우리가족 일자리** | 청년부터 여성, 중장년, 어르신까지 일하는 기쁨이 있어 희망잡니다.
- | **소상공인 살리기** | 작지만 알찬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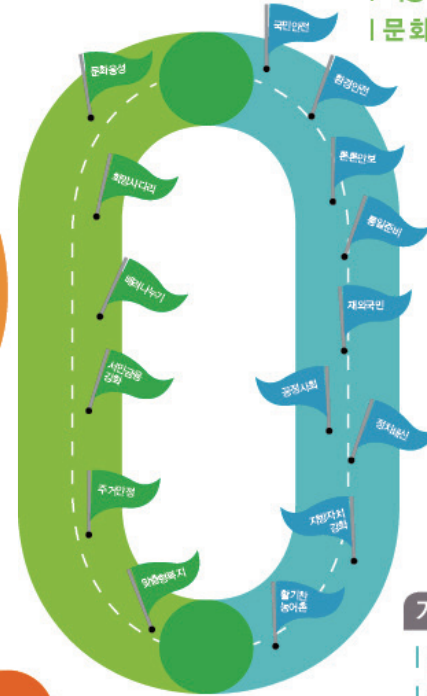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

우리집 행복 맞춤

- | **맞춤형복지** |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 | **주거안정** | 집 걱정없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서민금융강화** | 서민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행복지수 100% 도전

- | **배려나누기** | 소외된 이웃, 그들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 | **희망사다리** | 지친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합니다.
- | **문화융성** | 세계 속의 대한민국 브랜드를 활짝 꽃피웁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미래 변화의 중심

- | **국민안전** | 살기좋은 대한민국, 여성도 우리 아이도 모두 안전합니다.
- | **환경안전** |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 | **튼튼안보** | 새로운 한반도 시대, 단호하고 굳건한 안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 **통일준비** |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의 힘

- | **공정사회** | 차별과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정치쇄신** |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진심을 다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 | **지방자치 강화** | 지방자치가 활발해지고 지방경제가 튼튼해집니다.
- | **활기찬 농어촌** | 경쟁력을 살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듭니다.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

내수산업 살리기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10% 유턴시).....	29
	문화체험·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30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32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33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4
미래 성장동력 육성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37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제공.....	3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39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	40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기관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41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42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발굴, 포상, 격려.....	43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등.....	44
	19대 성장동력·5대 고부가가치·초혁신·삶의 질 향상 분야 지원 대폭 확대.....	45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46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 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	47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여 달 탐사 자립기반 확립.....	48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확대.....	49	
나눔경제 활성화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بانک 구축.....	51
	숙박·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52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함께 일하는 즐거움

우리가족 일자리 어르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55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56
우리가족 일자리 여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5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60
우리가족 일자리 청년·중장년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63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64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체험기회 제공65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66
	장년 근로자의 생애고용 지원 강화67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69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70
	자영업 창업 지원 효율화 및 한계 소상공인 전직·전업 지원 확대7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72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공동·협업 환경 마련73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ICT 카페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74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우리집 행복 맞춤

맞춤형 복지 우리가족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4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가능	79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80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81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82
	임신·출산·육아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	83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추진	84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	85
	학생·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 및 건강 증진에 기여	86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87	
맞춤형 복지 어르신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	89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90
	어르신들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완화	91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예방 관리 강화	92
	맞춤형 노인복지센터로 다양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	93
맞춤형 복지 우리아이	짬뽕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9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96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97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맞춤형 복지 우리아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98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99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100
맞춤형 복지 청년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03
	청년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104
주거안정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로 서민주거 안정 도모	107
	뉴스테이 정책 조기 정착 유도 및 임대주택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	108
	공공임대주택 기능 향상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확보	109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 가구 주거안정 기여	110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111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112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113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114
인건비 관련 기준 명시 및 관리비 빅데이터 구축으로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115	
비의무관리대상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비 분쟁 감축	116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우리집 행복 맞춤

서민금융 강화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등 119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120
	헬스케어 활동,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 121
	불완전판매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22
	보이스피싱(그놈목소리),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발본색원 123
	위장사고·보험금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처벌강화 124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행복지수 100% 도전

배려나누기 장애인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127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 12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9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개선 130
배려나누기 다문화가족	광역재활병원 확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으로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131
	다문화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132
배려나누기 사회적 약자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133
	어르신·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134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및 교사 관찰·추천제 내실화 ... 135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136
	법률홍닥터를 2배 늘려 수혜계층 확대 137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 및 소득을 합산한 고용보험 적용 138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39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나눔기본법」 제정,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 대폭 개선 140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성과연계보상(SIB)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으로 확대 141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행복지수 100% 도전

희망 사다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143
	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로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144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 운영·확대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145
	EBS-2TV(교육방송) 조기 실시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146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147
	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148
	청년취약계층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지원.....	149
문화융성	맞춤형 문화복지로 문화사각지대 해소,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151
	문화·관광·콘텐츠·ICT가 결합된 올림픽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152
	국민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설치.....	153
	권역별 게임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154
	「체육인복지법」 제정, 체육연수원 건립.....	155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	156
	1문화재 1생생문화재사업 실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157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미래 변화의 중심

국민안전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161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162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 설치.....	163
	순찰에 필요한 기초 경비 지원 확대 및 젊은층 참여 확대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	164
	우범자 소재 파악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근거 법제화.....	165
	신고문화 활성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166
	정부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국민편의제고.....	167
	뒷골목, 우범지역 등에 CCTV 확대 설치.....	168
	시민의 수면권·평온권을 침해하는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추진.....	169
	주택가·상가 주변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기준 완화.....	170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171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 확충.....	172
	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	173
	'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174
	육상·해상 특수구조대,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 확충.....	175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보호.....	176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국민안전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 훈련장 구축 및 R&D 투자 확대 177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178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 179
	유아·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180
환경안전	어린이·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183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184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절약 체계 구축 185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및 정비 추진 186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비오톱 조성 187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188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189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190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미래 변화의 중심

특전안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굳건한 대북 안보체계 확립 193
	장병 의료지원체계 문제점 해소로 장병 삶의 질 향상 194
	인생을 계획성있게 설계하도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 가능한 여건 조성 195
	군복무 기간이 발전기·재도약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196
	훈련수당 현실화함으로써 예비군들의 부담 경감 197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4년간 10만원 인상 및 진료비 감면을 확대 198
통일준비	국가위상 제고 및 한류 확산, 수출증대에 기여 199
	이산가족 정체성 제고 및 교류채널 다각화 기반 조성 201
	「북한인권법」 시행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촉구 202
	탈북민 자녀양육 지원은 물론 취업, 교육 등 지원확대, 남북통합문화센터 조성 203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실질적 통일준비 204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실시 205
재외국민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 207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208
	우리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 및 편익 제고 210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기본과 원칙의 힘

공정사회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가맹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13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21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기업의 변칙 상속, 역외탈세 차단	215
	공공재정 부정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216
	인사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217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218
	임금체불 사업주 재재 강화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219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원활화	220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221
정치쇄신	국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	223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고, 윤리심사 강화	22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225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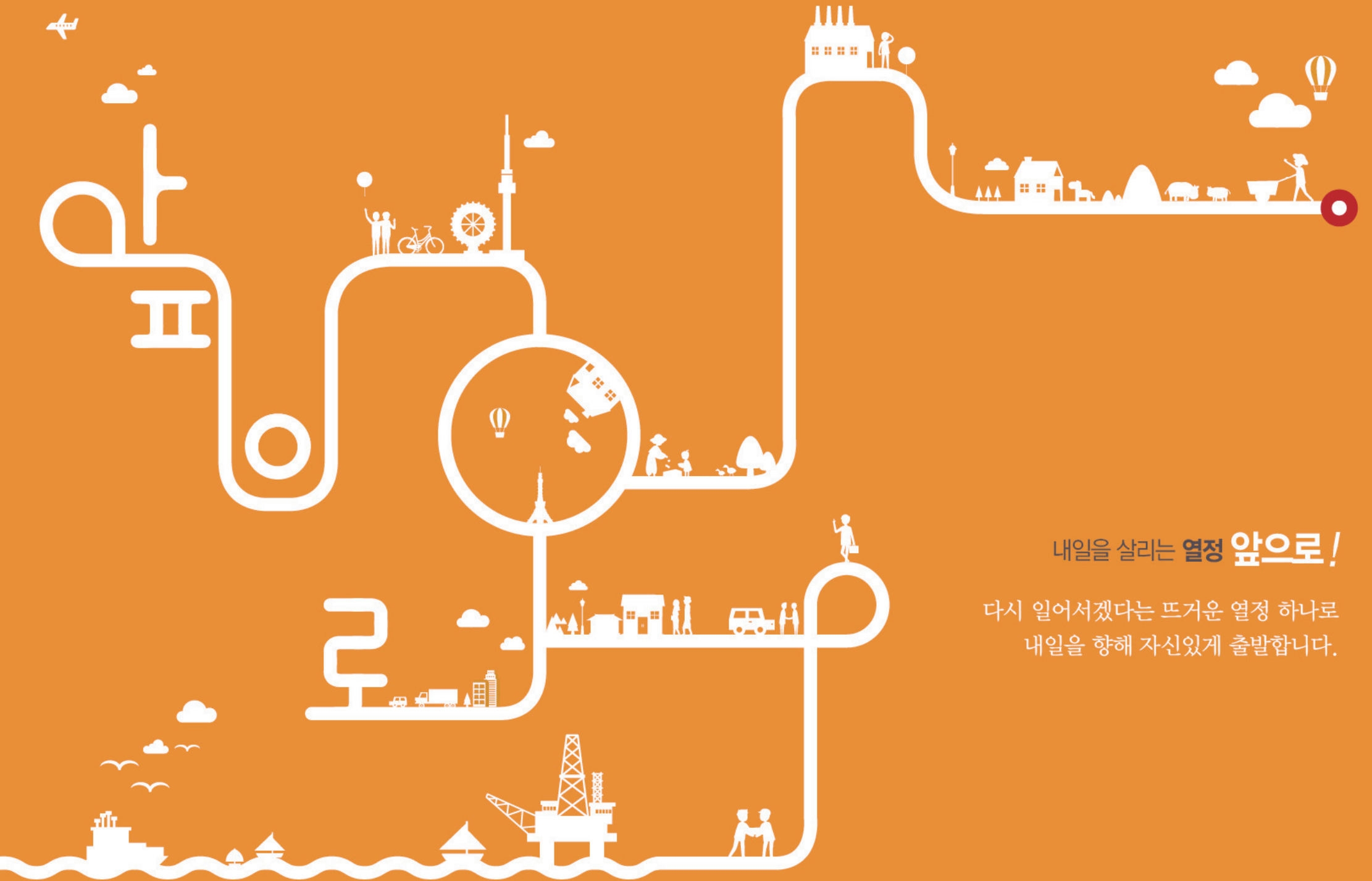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지방자치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227
	대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228
	중앙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 지방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229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가정과 학교 등 생활 주변의 치안 강화	230
활기찬 농어촌 농어촌 경제활성화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재해 지원대책 마련	233
	농촌지역에 복지시설 제공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	234
	풍수해 및 가뭄 대비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구축	235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융복합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23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활용가능성 제고 및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237
	FTA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238
	농수산물품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239
	발기반 정비 및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맞춤형 지원	240
	농촌지역 빈집을 체험·복지·생산 등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241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력제 관리 강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242
	어촌·어항·수산시장 관광 명소화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243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244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직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전망 강화	245	
어업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246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활기찬	해운거래스 설립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247
농어촌	해양환경 개선 및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	248
해양강국 건설	항만공간의 다기능 복합활용 지원 및 재정·민간투자 확대	249
	노후여객선 신규건조 지원 및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250
	e-Navigation 및 선박평형수 기술 개발 선도	251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내일을 향해 자신있게 출발합니다.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내수산업 살리기

-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10% 유턴시)
- 문화체험 ·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200~3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해외법인은 매년 2천여개씩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은 약 281만명('14년) 규모,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시 내수 부진,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최근 차이나 아웃 가속화는 제조업 U턴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 예상
- 해외 현지법인이 10% U턴시, '20년까지 연평균 47.1만명 고용창출, GDP 34.7조원 증가, 세수 21.4조원 증가 예상(한국경제연구원, KERI-CGE모형 활용 분석결과)

미래는 ...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10% 유턴시)

-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 세제지원 : 철수방식(완전 철수 또는 부분 철수)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까지 법인세 · 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 확대
 -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최대 2억원) 2배 확대
 -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시에도, 중소기업과 동반 U턴시 지원 확대
 - 공장입지 :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시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으로 재연장 검토
- U턴 경제특구를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 R&D 센터 설치, 고급인력 양성센터 설치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는 ...

- 메르스 영향 등으로 '15년 관광수지 적자는 60억 9,460만 달러
- K-Pop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매우 열악(1만명 이상 수용 가능 전문 공연장 전무)
- 국토 64%가 산지, 그 중 77%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산림보호 등의 이유로 산지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는 상황
- 외국인 관광이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어 지역 간 관광산업 불균형 심화
-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시스템도 미흡
-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방한관광객의 주요 활동이 쇼핑에 집중
 - 외래관광객 주요활동 : 쇼핑(74%), 식도락(46%), 유적지방문(27%), 휴양(7%)
-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29위
 - '15년 : 자연자원 107위, 인구 1백명 당 호텔객실 수 97위, 관광비용 109위 등
 - 자연자원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미흡하고 관광비용 높음

미래는 ...

문화체험 ·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 한국만의 경쟁력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 K-POP 아레나 조성 지원
 -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 K-POP 명성에 걸맞는 대형 K-POP 아레나 공연장 조성
 - * 수준 높은 전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K-Pop 공연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 * 장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 확보하여 지방관광 활성화

미래는 ...

- K-Culture Valley 조성 지원
 - *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하여 한국관광 랜드마크 구축
 - * 쇼핑, 음식, 영화, 음악, 패션 등 원스톱 플랫폼 구축
-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규제 합리화,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
 -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 산악자전거길 조성
 -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 시설 조성
-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시스템 구축
 -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 외래관광객이 철도와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패스를 도입, 관광지 이용과 숙박·음식점 할인 등으로 확대
 - K 트래블 버스 확대 : 서울과 지방을 잇는 K 트래블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편의 제고
 - 외국인 전용 관광 앱(App) 제작 : 교통정보, 실시간 통역기, 관광지 지도 기능 탑재
-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 치료를 위한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검진, 한방, K-뷰티, 스파, 찜질방 등) 중심의 관광객 유치
- 벤처 여행사 육성 : 웰니스 의료관광, 유적지 관광, K-Pop 공연 전문 등 특성화
- '20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달성시 117조원의 생산 유발, 54조원의 부가가치, 153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기대(현대경제연구원, '15.1)

해양관광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해양레저·관광 활동의 활성화에 비해 이를 수용할 여가휴양시설,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체험·교육프로그램 부족
 -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마리나 관광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시설 미비와 산업기반 취약

미래는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 요트를 이용한 국토대장정, 해안누리길 종주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철인 3종 대회(요트, 카누, 바다수영)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재활·치유 및 레저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건립,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및 크루즈 펀드 도입 추진
 - '20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5 → 10선석) 및 국제여객터미널 4개소 개발로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을 대폭 개선
-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레저선박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고선박 오픈마켓 등을 갖춘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수중레저법」 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

노동시장의 관행을 새롭게 개혁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일자리 창출력 저하, 기업규모·고용형태·노조유무별 격차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 경직된 인력운용 등으로 근로시간은 OECD 최장 수준임에도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현재의 경제·노동시장 여건과 괴리
 - 금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등으로 장년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 가중
 - 청년 취업애로계층 109만명('15년), 장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연령 53세
 -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 잔류 근로자 약 30만명, 20대 인구는 향후 4년간 10만명 노동시장 진출

미래는 ...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 노동개혁 법안 조속히 마무리 - 4대 입법(「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우선 추진, 「기간제법」은 추후 추진
-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합리적 인사운용 유도
 - 양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정착에 중점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액은 '11년부터 연평균 약 14.4%로 급격히 성장, '15년 매출액은 약 9.2조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면세점 매출액 규모 1위에 해당
중국인 관광객 유치경쟁 등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
 - '12년 말 면세점 특허제도 개편에 따른 특허기간 단축(10년 → 5년) 등 규제 강화로 롯데월드타워점, SK워커힐면세점이 폐점을 앞둬, 관광경쟁력 훼손, 입점기업의 경영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면세점 기업 투자위축 등의 문제 대두
 - 현행 면세점 제도로는 동일한 문제점 반복 예상

- 미래는 ...
-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면세점(보세 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관세법」 개정)
 - 면세점 근로자들, 면세점 입점 기업의 고용불안정 · 경영리스크 해소
 -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여 고용 · 투자위축을 해소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면세점 육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줄 미래가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

-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제공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기관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발굴, 포상, 격려
-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등
- 19대 성장동력·5대 고부가가치·초혁신·삶의 질 향상 분야 지원 대폭 확대
-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 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
-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여 달 탐사 자립기반 확립
-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확대

2,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는 ...

- '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2,979개이며 85.7만명을 고용 중
- '15년 중 전체 수출 감소(△8.0%)에도 중견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3.2% 증가 하였으나 중견 기업의 저조한 R&D는 중견기업의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정부 R&D 중 중견기업 비중이 3.1%로 중소기업(13.7%) 및 대기업(3.9%)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현재 중소기업 전용의 정부 R&D 지원 사업은 운용('16년, 8,532억원)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전용의 R&D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

미래는 ...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 R&D 수요조사('16년) → 예비타당성조사('17년) 등을 거쳐 '18년에 1,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D 신설
 -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
 -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을 가중하며,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과거의 특허분쟁은 글로벌기업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분쟁대응력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도 특허소송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 시급

- 미래는 ...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제공**
-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 특허 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先지원해 주고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
 -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현재는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1997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07년에 10년 연장하였으며, '17년 말 일몰 도래 예정
 - 그동안 「벤처기업법」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이 3만개, 매출 천억 벤처기업이 460개 (1조원 이상은 67개)로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은 고성장기업의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
 - 한시적인 「벤처기업법」으로는 벤처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모처럼 맞이한 벤처 재도약의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벤처기업법」의 한시조항을 없애고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미래는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 '17.12.31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 폐지
 -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개편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캐피탈 등 민간주도로 재설계 등



신규 수출 중소기업 1만개를 육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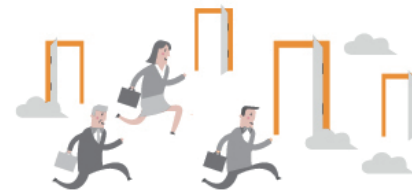
- 현재는 ...
- 최근 저유가 등 경기적 요인과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 등 구조적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상존
 - 대기업 수출은 세계적 공급과잉(철강·조선 등), 해외생산 본격화(자동차 등) 등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통한 돌파구가 매우 절실

- 미래는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규 조성하여 1만개 신규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 → 수출기업화 → GVC* 진입지원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 GVC(글로벌가치사슬) : 기업경영 전반의 글로벌화 및 단계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국내기업 → 해외진출기업), 지원범위(수출, 해외투자, 기술무역 등) 확대
- ** WTO 등 국제무역관련 규정을 고려하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중소기업판로지원법」과의 구분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반영

공공구매제도 확대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모색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운영 중
 -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연간 약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달성
 - 그러나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 요구가 존재하며,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50%) 상향조정을 통한 판로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 미래는 ...
-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기관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추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확대(현행 50% → 60%)



거래소 경쟁력을 높여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독점 거래소 체제의 성격상, 거래소 내 시장 간 상호 경쟁이 제한되어 서비스 질 저하와 시장발전 정체
 - 코스닥시장의 독자적인 발전 노력이 부족하여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능력이 확대되지 못함

- 현재는 ...
-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창조경제의 기업 및 개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자금심 고취 필요
 - 정부에서는 '13년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문화 확산 등 창조경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창조경제대상을 포상 중
 -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경제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미래는 ...
-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 거래소 개혁으로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
 - 거래소지주회사제도 및 독립시장감시법인 제도 도입 및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 추진
 - 한국거래소지주를 상장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교차상장, M&A·합작투자 등 해외 진출·전략적 제휴 확대 등 국제화 추진
 - 거래량 한도 확대, 매매대상 상품 확대(채권, ETF 등)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 완화
 - 금융투자관련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전환 및 규제를 네거티브화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 강화
 -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미래는 ...
-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발굴, 포상, 격려**
-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시 시상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공헌부문)'을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창업생태계 조성 등에 활동한 기업·개인 등을 포함
 - 창조경제 활성화 및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대상의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
 - 훈격 상향 : 현재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훈·포장으로까지 상향 조정, 11점인 시상 개수를 대폭 확대
 - 인센티브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에 준하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창조경제인에게는 APEC 기업인 카드에 준하는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우대 조치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인 제공
 - 네트워크 : 창조경제 기업과 개인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조성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현재는 ...

-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창조경제에 기반한 미래 먹거리 발굴
- 청년고용절벽 등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확대
- 전통시장 등 서민생활 현장까지 창조경제 확산 필요
-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현재는 ...

- 우리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산업 창출 전략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육성을 추진 중
- 19대 미래성장동력 : 주력산업과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의 4가지 파트 19대 분야

미래는 ...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등

-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
 - 멘토링, 매칭데이, 미니박람회 등 다양한 매칭행사 운영
-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창조형 소공인 육성 및 융합형 전통시장 확산
- 실패하더라도 창업 5년 이내 모든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회생제도 개선*, 재창업 지원자금 확대 등 재도전 환경조성

* 간이회생절차 적용 범위 확대(채무 30억이하 → 채무 50억이하) 등

미래는 ...

19대 성장동력·5대 고부가가치·초혁신·삶의 질 향상 분야 지원 대폭 확대

- 기존 19대 성장동력 분야 : 관련된 모든 규제를 대폭 철폐하되 사업 특색에 따른 정밀 맞춤형 규제개혁 실시
- 5대 고부가가치 분야 : 태양경제, 수소경제, 탄소경제, 물경제, 지능경제 등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에 집중 투자
- 초혁신분야 : 뇌, 우주, 플라스마, 초전도, 사이보그 등 향후 인류의 미래를 새로이 개척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 추진
- 삶의 질 향상 분야 : 재난 대응, 기후변화 대응, 안보와 안심, 생활밀착형 인프라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분야 발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미래 유망한 분야인 생명(신약, 의료기기 등), 나노, 미래소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로 기술 선점 및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필요
 - 新기후변화체제 합의에 따른 CO₂ 의무 감축으로 저탄소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긴요

미래는 ...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바이오: 미래 유망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
 - 국내 신약개발 기업에게 파이프라인 공급 및 뇌 산업 성장촉진 기반구축
- 나노: 핵심적인 나노 전략 기술 개발로 글로벌 신시장 창출 및 기업 성장 모델 확산, 미래 대응
 - 새로운 물질·기능을 구현하는 미래소재 개발로 창조산업 육성 및 소재강국 실현
 - 나노기술 연구성과를 산업계의 수요와 연결,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산업 창출 촉진
- 기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6대 핵심기술 분야(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 집중 지원

혁신적인 ICT 융합 확산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CBM(IoT-Cloud-Bigdata-Mobile)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중
 - * ICBM : 기존의 산업과 달리 멀리 크게 변화하는 산업을 의미

미래는 ...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 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

- 홈, 의료, 에너지 등 전략분야의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모델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확산 촉진
 - 유망업종(제조, 금융, 의료, 유통 등) 대상 지능정보화(인공지능, IoT, Cloud 등) 기술 적용을 통해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추진
- SW수요 밀집 집적지에 SW융합클러스터를 '17년까지 10개 지역에 조성
 - SW수요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선정
- 5G이동통신, UHD 등 최신 ICT 기술의 조기 상용 서비스로 콘텐츠, 단말산업 등 후반 산업의 동반 성장 추진
 - 초고속화질(UHD) 지상파 방송을 '17.2 수도권 개시 후, 광역시권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17.12), 시·군 지역('2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세계 최초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 개시

한반도 최초로 달 탐사를 성공시켜 우주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한국형발사체 자력개발을 통해 우주기술 자립화를 조기 달성하고 전략적·안보적 측면에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 필요
 - 발사체 미보유시 위성발사를 선진국에 의존해 지속적인 우주개발 곤란
 - 에너지 자원 확보, 우주활동 영역 확대 등 장기적 미래 대비를 위한 달 탐사 추진 필요

- 미래는 ...
-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여 달 탐사 자립기반 확립**
- 한국형 시험발사체 발사를 위한 75톤급 엔진 개발 추진 및 300톤급(3단형) 한국형 발사체 독자 개발 및 발사체 기술자립
 -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발사로 달 탐사 자립기반 구축
 - 위성, 나로호 등으로 쌓은 기술 및 시설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우주기술과 타 분야(전자통신, 에너지, 기계, 소재 등) 기술 결집
 - 미 NASA와 달 탐사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 1단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하여 발사

연구자들에게 안정적·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현재는 ...
- 사람(연구자) 중심의 창의적·선도적 기초연구 확대 필요
 - 과학기술인들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선진화 견인을 위한 핵심요소로 긍지를 갖도록 예우하고 지원



- 미래는 ...
-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확대**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연구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R&D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 우수한 연구자의 안정적·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
 - 기존 3년의 연구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과제들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도록 추진
 - 과학기술인이 명예와 긍지를 갖도록 명예의 전당 헌액, 업적홍보, 강연·토론행사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나눔과 공유로 우리 경제에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나눔경제 활성화

-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بانک 구축
- 숙박·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필요
 - 정부의 정책으로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사회적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메카니즘 구축 필요

미래는 ...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بانک 구축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래소 설립 추진
 - 1단계: 기부형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젝트형 거래소 플랫폼 구축('16.7 출범)
 - 2단계: 사회적 기업의 주식 상장·유통을 통해 사회적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상장·유통형 거래소 설립 추진
- 2단계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연계, 사회적 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투자자 인증제도 도입
 -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 투명성, 공익활동,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세법」 개정)
-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통합플랫폼(시니어 재능기부 بانک) 및 대기업 CSR(사회공헌)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다양한 시니어 재능기부 봉사단 통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SE 브리지센터 설립)

주택·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현재는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 육성이 필요하나 법적근거 미비
 - * 공유경제 : ICT플랫폼이 특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간 시장 거래를 중개(차량·숙박공유 등)
 - 미국·유럽 등은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일부 기업(Uber, AirBnB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기술발전 등으로 확산 추세이나, 법적 근거 미비
 - * 예)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경우 불법

미래는 ...

숙박·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 공유경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분야별(차량, 숙박, 농기계, 크라우드 펀딩, 공간, 재능)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공유경제 관련법령 개정 또는 「공유경제기본법」 제정
 - 공유경제 숙박, 차량 등 분야별 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
-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거래위험 방지방안 마련



내일이 있어 노후가 활기칩니다

우리가족 일자리 [어르신]

-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증가율('17년 14% → '25년 20%)과 노인 빈곤율('14.4분기 44%) 등을 고려할 때 어르신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



미래는 ...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 '17년~'20년까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 → ('20년) 78.7만개
 - 고령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 매년 6만개씩 확대, 어르신 민간취업 일자리 매년 3만개씩 확대
 - 어르신의 재능나눔은 매년 1만개씩 확대, 활동 지원기간 연장(현행 6개월 → 9개월)
-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 17개 시도에 취업교육센터('15년 6개소 → '16년 8개소, 개소당 5천만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무설계 및 직무 교육 실시
-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16년 128개소 → '20년 262개소)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월 175만원, 100명 담당)으로 개선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개설된 노인대학이 1,600여 곳에 이르는 등 노인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용과 교재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래는 ...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노인 교육 및 복지 증진
 - 노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노인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교육단체 및 노인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지원, 노인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자치구 대상 노인학습마을 지정 및 지원



일하는 엄마가 더욱 행복해집니다

우리가족 일자리 [여성]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일·가정 양립,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는 ...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의 일선 현장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
-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환경 마련 필요

미래는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인증기업 확산 및 내실화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유도 및 독려
 - 既 인증기업·기관대상 사후컨설팅
 - 공공기관 선도적 실천 유도를 위한 인증 의무화 등
- 여성의 경력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지 않고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새일센터('15년 147개소)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재취업한 여성 중 40~50대 여성이 70%를 차지)
 - 30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및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필요

- 미래는 ...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운영
 -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 취업여성의 재(再)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청년·중장년들의 가슴에 품은 열정이 무력무력 열립니다

우리가족 일자리 [청년·중장년]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체험기회 제공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
- 장년 근로자의 생애고용 지원 강화

청년희망아카데미와 함께 청년의 꿈이 커집니다

현재는 ...

- 청년의 구직 애로는 제한된 정보, 경험 부족, 금전적인 부담 등에 근거함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 멘토링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대책이 필요
 -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운영,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지역에 국한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

미래는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

-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혜택 확대(※청년희망펀드 활용방안 검토)
 - 청년희망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 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

* FCP : 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미래 역량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 EAP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네트워크 내 기업 요청 특화 교육 등 진행 및 취업 연계

*** K-JOB : 창직 교육, 창직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전환시 스타트업 지원



벤처장학제도로 취업까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 현재는 ...
-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명도 및 고용불안 등을 우려, 우수인력의 취업 기회와 전문가 및 기술직 등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
 - 스톱옵선제도 등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및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인력확보

- 미래는 ...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게 하여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 '16년 벤처단체에서 시범운영 후, '17년 본격 도입
 - 벤처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소요재원을 조달



청년 국제인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는 ...
-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국제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청년 국제 인턴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여론 증대
 - 현재의 K-move 사업으로는 인턴 확대에 한계

- 미래는 ...
-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체험기회 제공**
-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재외공관·해외지사들은 고효력의 인력 활용 가능
 - 재외공관(KOICA 포함)·무역관에 파견되는 청년 인턴의 수 확대, 급여 및 주거 지원
 - 해외동포기업들과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 민간 기업의 해외 지사에 청년 인턴을 파견하여 현지사정에 정통한 청년 전문가로 양성 장려
 - 워킹홀리데이 및 비자쿼터 확대 등을 통한 청년 해외진출 확대

청년예술가에게 일자리, 국민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현재는 ...
- 예술전공 대학생들은 졸업 후 관련분야의 취업이 어려워 대부분 예술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
 - 졸업 후 3년 이내 예술활동을 통한 월 평균 수입 50만원 이하가 전체 50%
 - 예술전공 졸업생들이 생계 유지와 함께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예술분야 창업을 통한 청년예술가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기관·기업을 통한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

- 미래는 ...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
-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및 전국의 예술대학교에 확대하여 예술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예술분야 구직정보 제공, 취업 상담, 창업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사업 또는 메세나* 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예술인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신청받은 후, 이에 적합한 청년예술가 인력을 기업에 제공(공연, 전시, 제(작)품 등 예술 전문아로 범위 확장)
 - *메세나(Mecenat) :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
 - 청년예술가들의 창업콘텐츠를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들은 기업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예술콘텐츠 제공
 - 1개 센터, 年 10팀, 1개팀 5명 일자리 창출('17년~'20년 3,500명)
 - 예술활동만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질 높은 예술콘텐츠 제공

100세 시대! 제2의 전성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노동시장에서 장년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도 퇴직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장년 근로자들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급



- 미래는 ...
- 장년 근로자의 생애고용 지원 강화**
- 장년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기회 확대
 -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부여하여 점진적 퇴직 지원 강화
 - 장년기 근로시간단축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 장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확대(전국 고용복지센터에 인소싱 형태로 입주)
 -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도입을 제고를 통한 60세 정년제 안착 기대
 - 재직근로자 대상 생애설계 기회 제공, 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장년 구직자 대상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장년인턴 등 장년 생애고용 토대 구축

작지만 알찬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합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
- 자영업 창업 지원 효율화 및 한계 소상공인 전직·전업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공동·협업 환경 마련
-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ICT 카페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15.8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2만명, 전체 취업자 2,614만명 중 21.5%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 차지
- 자영업자의 평균 월매출은 '10년 990만원에서 '13년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5년 폐업한 자영업자 76만명
 -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50대)의 퇴직 본격화로 해당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발생

미래는 ...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 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
 -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 향후 7년 이상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인상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차등 감면을 적용)
 -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향후 장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완화
-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을 완화
 -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 향후 매출액기준(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원 미만 → 1억원 미만)을 완화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현재 年 3회 미만 체납, 매출 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

영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입, 구도심 상권 침체 등에 따른 서민상권 쇠퇴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
 -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상권활성화에 공헌한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구도심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이에 따른 상권활성화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

- 미래는 ...
-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
-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 상권을 관리·육성토록 함
 -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계약갱신요구 5년 → 10년)으로 상인 영업권 보호
 -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을 육성

자영업 시장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8배 높고, 생계형 소상공인 수는 계속 증가하여 외국에 비해 과당경쟁 구조
 -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주변 동종업체 및 대형업체의 출현, 준비없는 창업 등으로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9%에 불과
 -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연평균 80.5만명이 폐업하고('13년), 폐업 후 상당수는 무직자로 전락

- 미래는 ...
- 자영업 창업 지원 효율화 및 한계 소상공인 전직·전업 지원 확대**
- 한계 소상공인이 폐업 후 전직 및 전업시 지원 확대('20년까지 2만명)
 - 전직 : 폐업(예정)자 중 전직희망자를 발굴하여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연계 지원
 - 전업 :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교육 → 멘토링 → 자금) 지원규모 확대
 - 자영업자 30대 과밀업종을 지정, 과밀업종에 대해 창업시 상권분석 의무화, 가산금리 부과 등 금리차별 차등 지원
 - 과밀업종 분야 숙련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해외진출 지원
 - 생계형 업종 중심의 자영업 시장 과당경쟁구조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성 제고
 - 소상공인 창업-성장-퇴로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250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는 ...

- 소상공인은 매년 약 90만개 창업하고 80만개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
- 소상공인이 폐업시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취약
 -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존재하나, 보험료 부담(월 34,650원 ~ 60,525원)으로 가입률은 0.3%(16,399명) 수준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15.12.31 통과) 하였으나, 현재 소요예산 미확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근로자는 지원 중이나,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

현재는 ...

- 소공인은 경제발전에서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소공인 밀집지구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
 - '16년 한·중 FTA 발효시 영세 소공인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얼리, 기계·금속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수요는 증가함에도, 센터 수가 제한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

미래는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소득 규모가 가장 영세한 기준보수액 1등급 가입자들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1인 소상공인 대상
 - 매년 5.5만 명에게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의 50%를 경감

미래는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공동·협업 환경 마련

-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 전용 공동인프라(공동작업장, 공용창고 등)를 '20년까지 150개로 확대
-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 상담·지도 및 교육 등 현장밀착 서비스를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년까지 100개로 확대

활기차고 젊은 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전통시장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필수 시설인 주차장 보급률 확대 필요
 - 전통시장에 스마트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등 ICT를 접목하여 편의성 강화 필요
 - 전통시장 상인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2만여 점포가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등 전통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고객 유치 및 빈 점포를 활용하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 필요

- 미래는 ...
-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ICT 카페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
- 도심지역의 주차빌딩 건립 등을 통해 '20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90%로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전통시장에 주변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연간 50개)
 - 전통시장 내 모바일기기 활용 및 교육 등을 위한 ICT카페 및 와이파이존을 전체 시장에 설치하고, 우수 점포를 중심으로 모바일 혁신점포 2만개 지정 등 ICT화 추진
 - 전통시장 유희공간에 쇼핑·문화를 접목한 복합공간 청년몰을 80개 조성하고, 빈 점포를 청년상인 인큐베이터로 활용, 120개 시장을 청년상인 집중 육성 시장으로 조성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

행복한 삶을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다함께 당당하게 도전합니다.



희망찬 우리집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맞춤형 복지 [우리가족]

-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4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가능
-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불편 해소
-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추진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
- 학생·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대형병원에서도 간병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현재는 ...

- 간병제도가 없어 간병인 고용 등 간병비로 年 2조원(12년) 부담
 - 간병으로 인한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감염 등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메르스가 급속 확산된 원인 중 하나는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함께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미래는 ...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4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가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예산 확보, 간호인력 이직을 줄이기 위한 야간이나 시간선택제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
- 당초 '18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16년 4월로 앞당겨 시행, '16년 말까지 모두 400개 병원으로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이 하루 1~2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고,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예상

지역건강보험의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지난 2000년에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아직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개선 필요

- 미래는 ...
-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인 감소를 추진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 자동차나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은 제외
 -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 인하효과 예상)
 - 일부 고가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세대당 약 1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
 -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나, 현재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 446만명이 아직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되고, 이 기간을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되살리고 싶어도 추후납부가 제한되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였음

- 미래는 ...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 446만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
 -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창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 지원(4.4만명)
 - (취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시 연금보험료 10% 추가 지원(30만명)
 - 가입기간 5년 밖에 되지 않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5,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것입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 원스톱으로 한번에 해결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속 추진
 - 복지업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제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는 한계 발생

- 현재는 ...
- 철분·엽산제, 신생아 의료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나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각각의 제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 존재

미래는 ...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14년~'15년) 성과를 전국 읍면동으로 확산('16년 700개 → '18년 전국 읍면동)
 - * 시범사업 성과 : 서비스 연계 3.4배, 방문상담 4.3배, 사각지대 발굴 6.2배, 수혜자 만족도 92.8점
 - 읍면동을 공적부조의 신청·접수처리 중심에서 복합욕구를 해결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담당 기관으로 재편
- 확충된 복지인력 6천명('14년~'17년)과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한 재배치 등을 활용하여 읍면동에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 시군구 사례관리 전문직위 활성화, 시도 맞춤형 복지전담관리기능 강화
 -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방문상담,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 업무 전담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미래는 ...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불편 해소**

- 임신·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통합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혼인 또는 출생신고시 신청서 한 장으로 각종 지원신청을 한번에 해결
 - 신청서 한 장으로 임신부 지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자체 각종 지원(다둥이 카드, 출산지원금, 보건소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등 각종 감면 혜택 신청
 -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접수체계 개선 추진
- 혼인·출생신고시, 통합신청에 따른 기본정보 파악으로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구비해야할 각종 신청서류를 신분증과 통장사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 혼인·출생신고시, 신혼부부 주거지원부터 자녀 양육지원까지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지원서비스 정보 해설책자 제공
-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통합 신청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개별사업 담당기관으로 자동 통보되는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학교와 가정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는 물론 학생-가정-학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
 -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부모회 임원 등 소수 학부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 참여가 부족
 -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하여 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특히,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참여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교 참여 휴(공)가제 도입 절실

- 미래는 ...
-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추진**
-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휴(공)가제의 법제화 검토
 -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근거 마련 추진
 -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 및 효과 검토 후, 민간 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으로 가족행복을 구현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아동폭력 등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 미래는 ...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 강화
 - 아동학대 행위자(가해부모)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취약·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족교육 실시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가족교육 활성화법」(가칭) 제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을 체계화하고, 가족교육 관련 총괄·조정 역할 강화
 - 가족교육 접근성 제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군 부대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운영 확대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야간·주말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온라인·모바일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족교육 수강 여건 조성

국공립학교 체육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학교체육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
 - 시설의 성격상 학생 교육활동에 우선 사용하고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 학교장의 관리책임 문제 및 특정인(단체)의 독점 사용 등으로 다수의 지역 주민 이용에 미흡
 - 상기의 여건 상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개방 여력이 부족하여 지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용이 용이하도록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필요

- 미래는 ...
- 학생·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 학교체육시설은 학생 교육활동에 우선 사용하고,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개인(단체)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 등의 방식으로 개선
 - 이용절차 간소화 : 지역 주민들의 시설사용 접근성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온라인 '학교체육시설사용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사업 및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 및 건강 증진에 기여 기대
 - ※ 국공립학교 대상 우선 실시하고, 추후 사립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증가 : '15년 기준 전체가구 22%
 - 반려동물 평균수명(15년)이 늘어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치료 부담 증가로 동물유기의 원인이 됨
 -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당청구 등으로 의료보험 미활성화
 - 반려동물 보유국민 부담완화 목적의 민간분야 동물의료보험 활성화 필요

- 미래는 ...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 민간분야 동물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제도적, 시스템 보안을 통한 활성화 저해 걸림돌 제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정보로 개체별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보험금 부당청구 예방장치 마련
 - 보험가입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가입과 동물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비용 지원
 - 수의사와 동물보유자의 결탁을 통한 보험금 부당수령 방지방안 연구용역 추진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맞춤형 복지 [어르신]

-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
-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어르신들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완화
-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예방 관리 강화
- 맞춤형 노인복지센터로 다양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

어르신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현재는 ...

-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현재 1만 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 및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 고려하여 세부 개선방안 마련 필요

미래는 ...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

-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 정액제 적용 구간을 확대하되, 구간 초과시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마일리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치매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지원 강화 필요
 -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하여 치매발병 또는 중증화 이전에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악화방지, 보건소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필요
 - 주간보호를 통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가족 구성원 간 돌봄갈등 해소 및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이 절실

현재는 ...

- 어르신의 신체기능 유지, 치매예방 등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꾸준한 운동 실천을 확산하고자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필요

미래는 ...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진단서), 경도인지장애자(진단서), 인지저하자(보건소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대상으로 1일 최대 12시간 (07:30~19:30)의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치매선별검사, 예방교육, 상담,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점검
 - 이용자의 건강 및 인지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뢰 및 기타 관내 사회복지자원 연계

미래는 ...

어르신들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완화

- 건강백세운동교실: 경로당 등에 주 2회 60분 이상 운동강사 파견
- 건강마일리지: 건강백세운동교실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 마일리지에 따라 상품(지역 농산물, 파스, 건강밴드 등) 지급
- 건강생활(운동) 실천율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생활체육시설 분포가 낮은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마일리지 확산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센터로 노인복지관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고령화 심화,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홀몸어르신 지속 증가
 - 홀몸어르신은 부모노인·자녀동거 노인보다 고독사·자살, 안전 문제, 결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돌봄 필요도 높은 실정

- 현재는 ...
- 어르신만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의 기능 개편 필요
 - 단순 여가활동 및 식사제공 등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서비스 등으로 확대 개편 필요

- 미래는 ...
-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예방 관리 강화**
- 홀몸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 수혜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몸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강화
 - 서비스 제공기관 수 확대
 - 그룹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독감·우울감·자살생각 경감
 -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 및 복지서비스, 민간 자원을 연계한 자살고위험군 노인 대상 통합적 자살예방 사례관리 강화

- 미래는 ...
- 맞춤형 노인복지센터로 다양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
- '시니어 행복센터'(가칭) 설치 및 시범사업 운영
 - 고학력 베이비부머 세대, 기존 노인세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제공
 - 건강교육, 영양관리 등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기능 강화
 - 우울, 치매, 학대 등 요보호노인 대상 주·야간 보호서비스 병행
 -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60세 미만의 보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자조모임, 여가프로그램 등) 제공
 - 어르신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 노인관련 전문적인 상담(성, 일자리, 생활 등)을 수행하는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 시니어 행복센터의 우수프로그램을 지역 노인복지관과 연계,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형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환하게 빛나는 우리 아이, 미래도 환하게 빛납니다

맞춤형 복지 [우리아이]

-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 향상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 확대
-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학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초·중등학교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열손실이 높은 기존 건축물의 찜통 및 냉동 교실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고, 학교운영비 중 공공요금 비중이 높아 찜통 및 냉동 교실 해소에 어려움
- '20년부터 공공기관에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도입 의무화 계획(국토부, '15.12.1)에 대비한 전기요금 부담이 없는 에너지 자립 선도모델 학교 건립 필요

미래는 ...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 찜통 및 냉동교실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 및 자연에너지 이용의 에너지 자립형 eS(energy-Self)스쿨 설립 추진
- 제로에너지빌딩(eS스쿨)을 학교에 시범적용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
-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공공요금의 부담 완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 기대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체험학습 및 연구 활동의 장으로 활용 병행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주는 초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지원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
 - 시간제 돌봄: 만 12세이하 아동 대상, 보육, 놀이, 식사·간식, 등·하원 등 돌봄 제공(정부지원 연 48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만 3개월~24개월 영아 대상, 1일 4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월 200시간 이내)

- 현재는 ...
- '15년에 1~2학년은 가정에서와 같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저학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돌봄교실에서 약 21만명을 수용
 - 3학년 이상 중 1만 8천명은 돌봄교실에서 수용하고, 1만 2천명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수용하여 총 3만명 수용
 - 학교 교실에 한정된 돌봄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미래는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현재 0세~1세(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2세 (36개월)까지 확대
- 임신·출산·보육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기능 추가
- 시간당 이용단가 상향(최저임금 추이에 따름)

미래는 ...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 돌봄수요 충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학년 중심 돌봄교실 '20년까지 2만명 확대
 - 3~6학년은 학년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돌봄 수요 충족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1~2학년 중심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질 제고, 저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보강, 3~6학년은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학기말 등에도 공백없이 운영
- 저녁돌봄 안전관리 강화: 학교에서 저녁돌봄 운영시 인근 지구대의 순찰 강화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적은 경우 지역아동 센터와 연계 운영
- 지역 자원 활용 활성화: 지역의 다양한 시설의 무료 활용 및 연계를 통해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 등에 지역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에서 돌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 있음(자녀가 다니기 희망하는 시설 : 국·공립 유치원 40.5%, 국·공립 어린이집 39.0%, 민간유치원 7.3%)
 -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학교 수는 많지만, 이용하는 원아 수는 사립의 약 23.6%, 교실 수는 사립의 약 27.2% 수준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미래는 ...
-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 향상**
-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라 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국가 재정 및 환경 여건 고려 추진
 - 지역별 취원대상아 인구 추이 및 초등학생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고교 진학률은 99.7%로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현재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공적지원 사업을 통해 39% 이상의 고교생*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공평한 교육 기회 확대 제공 필요
- *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재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 포함시 약 57%가 혜택을 받고 있음



- 미래는 ...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 확대**
-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 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화하고,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학교장, 경찰 등이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율이 낮아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 되지 못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학력취득, 기술습득 등 기초적 지원에 머무르는 실정

미래는 ...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해당 청소년 동의 없이도 최소한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및 발견시 해당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통하여 지원 안내 등 정보제공과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기대
-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등 지원 강화
 - 학업 : 시·도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 및 학력취득 지원
 - 취·창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체사업장 운영·인턴십 제공(각 시·도별)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



젊음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맞춤형 복지 [청년]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는 ...

-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필요
※ 금리 현황 : ('10년 1학기) 5.7% → ('10년 2학기) 5.2% → ('11년) 4.9% → ('12년) 3.9%
('13년~'15년 1학기) 2.9% → ('15년 2학기~'16년 1학기) 2.7%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월급이 많지 않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상환하기에 많은 부담을 가짐



미래는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자금 대출 금리 0.2%p 인하(2.7% → 2.5%) 통하여 청년 및 가계 부담 완화
- 소비자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타 정책자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16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이 본인의 상환부담능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부담 완화

청년의 권리 규정을 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는 ...

- 교육부, 고용부, 국토부, 등 각 부처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부처 간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통합적 근거 법률 마련이 필요
 - 각 부처별 청년관련 정책 약 142개, 약 10조원 대비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음
- * 청년관련 정책 기준 설정 또는 지자체 정책 포함 범위에 따라, 정책 개수는 달라질 수 있음
- 현 행정명에 근거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위상 지문기구로 각 부처별 시행 중인 청년관련 정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로 정책대상이 불분명하여 각 부처에서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각기 다르고,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된 정책 위주로 집행되고 있음
- 청년의 정의와 정신을 담은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 청년정책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 청년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제도 부재

미래는 ...

청년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 「청년기본법」 제정
 - 본질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상위 근거법률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확보 가능
 - 현재 파편화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집행 가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확보
 -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과 시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보장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사회 안전보장과 청년 정신의 발현기여



집 걱정없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정

-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로 서민주거 안정 도모
- 뉴스테이 정책 조기 정착 유도 및 임대주택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
- 공공임대주택 기능 향상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확보
-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 가구 주거안정 기여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 인건비 관련 기준 명시 및 관리비 빅데이터 구축으로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 비의무관리대상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비 분쟁 감축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14년에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당시 특정법 운영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령상 미비(국공유지 건축물 구제)로 구제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구제를 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미래는 ...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로 서민주거 안정 도모

- 특정건축물 정의 및 적용대상
 -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하였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
 - * 다세대(세대 전용 85㎡이하),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 특정건축물 신고
 - 건축주는 설계서와 현장조사서(건축사 작성) 첨부하여 신고
- 사용승인 요건
 - 대지 기준* 등 적합시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용 승인
 - * 자기 소유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 대지 포함)의 건축물, 국·공유지(처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써 특정건축물 소유자의 매각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간주) 건축물로 「건축법」, 도로기준 적합
 - *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나, 1년 내 납부 조건시 사용승인 가능

뉴스테이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 필요
 - 단순한 시설물 관리 및 임차인 관리 외에 이사, 청소, 육아, 세탁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뉴스테이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

- 미래는 ...
- 뉴스테이 정책 조기 정착 유도 및 임대주택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
-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를 완화하여 뉴스테이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를 추진
 - 보육, 교육, 헬스케어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계층에 특화된 다양한 평면 설계를 도입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 세탁 등 개별 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로 인증
 - LH공모사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단지 공급 추진,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등 추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준공 후 장기간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필요



- 미래는 ...
- 공공임대주택 기능 향상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확보**
- 노인·장애인 등의 주된 안전사고 발생 장소인 주택에 대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시행
 -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세대출입 방화문 개선,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등 안전관련 시설물 개선 사업 추진
 - 안전관련 시설물 주요항목: 세대출입 방화문 개선, 승강기 공사, 장애인경사로 설치, 발코니샷시 설치, 보안등 교체, 계단 안전난간 등

빈집을 고쳐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지원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현재는 ...

- 최근 정비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심(洞지역) 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유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확산 필요
 - 인구 감소로 점차 증가하는 빈집·빈방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축 없이도 잉여 공간 공유를 통해 저렴한 주거 공급 가능
 - 쇠퇴하고 있는 도심 공동체 회복 및 계층 간 교류 확대 효과

현재는 ...

-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 확대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필요
 - 홀몸어르신 등의 경우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

미래는 ...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 가구 주거안정 기여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 빈집을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금 지원을 통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업 발굴
- 매년 600호 수준의 정비사업 추진
-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1~2인가구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

미래는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단지 조성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
- 어르신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16년~'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
 - * '16년~'17년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 공급 ('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
 -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젊은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학생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

- 젊은층이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 저축해야 전국 평균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주택가격
-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불안정한 주거이동 지속
- 젊은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은 30%에 육박하는 등 주거불안이 가중

현재는 ...

- 기숙사 노후화로 인해 열악한 학생주거환경 개선 필요

미래는 ...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 입주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80%, 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노인·주거급여수급자 20%
 - 임대료 :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
 - 거주기간 : 거주기간은 6년이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 편의시설 :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정부는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으로 현재 9만여호 확정
 - 나머지 5만여호는 도심 내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나 도심의 경우 국공유지, 공기업토지 등이 부족하여 사유지 매입 등으로 사업비 추가소요 예정

미래는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 기숙사 유해실내환경 리모델링 통한 학생주거환경 개선
 - 기숙사시설 및 고시원 등 학생집중 거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요소 관리감독 강화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통한 그린캠퍼스 구현
 - 노후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시설 에너지 절감
 - 캠퍼스 내 기숙사를 중심으로 강의실, 강당 등 교육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및 기숙사 유해실내환경 리모델링을 통한 학생 주거환경 개선
 - 노후 기숙사시설 그린 리모델링으로 온습도, 조도, 소음도 등 학생 주거환경 및 건물 안전성 점검·개선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하며(15.4 기준), 대학가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 국·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
 - * 4개 사업(서울2, 경기, 부산) 3,766명 수용규모

미래는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
 -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 *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 *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월 24만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사립대 민자기숙사(월 31만원) 대비 약 50% 수준임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로 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민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사무소가 부과 및 관리
 - 관리비 적정집행 유도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과 지자체 감사 등을 운용 중이나 투명성 제고에 한계
 - 인건비가 제외된 기형적 입찰방식으로 관리비리 증가
 - 공동주택 단지별로 청소, 경비,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수가 달라 적정한 관리 인력 기준 필요

미래는 ... **인건비 관련 기준 명시 및 관리비 빅데이터 구축으로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
-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를 이용, 관리비의 적정부과 및 관리여부를 검증하여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비리요인 사전 차단
 - '17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비의 적정집행과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는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의무관리대상(30세대 이상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국토부의 「주택법」 일부 규정 이외에 주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아 관리가 아원화된 상태
- 세부적이지 않은 「집합건물법」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 자율적인 운영체제에 머물고 있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및 입주민 분쟁과 불만 초래

미래는 ...

비의무관리대상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비 분쟁 감축

- 비의무관리대상(약 360만세대, 전국 1,210만세대 중 약 30%)에 대해서도 의무관리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
 - 관리비 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동대표 교육이수 등을 의무화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기준과 주택관리사 인정 관리실적 기준인 5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관리비 내역고지 및 공개 의무화(30세대 이상은 권고)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비 공개 항목 수 등을 결정



서민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서민금융강화

-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 헬스케어 활동,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
- 불완전판매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보이스피싱(그놈목소리),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발본색원
- 위장사고·보험금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처벌강화

서민 가계금융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현재는 ...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취약계층에는 금리 하락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특히 금융회사별로 개인신용대출금리 양극화)
- 금융수요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 (대출, 채무조정, 취업알선 등) 지원체계 미비
-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미래는 ...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 향후 3년간 1.4조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 공급
- 자금지원, 금융·취업상담, 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 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통합
-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 금지되는 급여액을 180만원 수준 (현행 150만원)으로 확대
-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16년 상반기 중 실시)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추진시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 → 60%로 확대(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70% → 90%로 확대('16년 상반기 중 실시))

사금융의 대출금리를 낮추겠습니다

- 현재는 ...
-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年 25%임
 - 그러나 최근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하면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사적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인하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미래는 ...
-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 최근의 낮은 기준금리 및 금융업(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 등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종전 25%에서 20%로 인하
 - * 대부업법상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34.9% → 27.9%로 하향 조정 감안
 -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 ('16년 중)



습관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신 보험상품을 만들겠습니다

- 현재는 ...
- 맞춤형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상품의 혁신 기대
 -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텔레매틱스 보험 등 새로운 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맞춤형 보장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습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 등의 효과 발생도 기대

- 미래는 ...
- 헬스케어 활동,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
- 자동차 주행거리,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운행시간대 등 운전습관 분석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 체중, 운동습관 등을 분석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 추진계획
 -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텔레매틱스 업체 등과 「맞춤형 정보활용 보험상품 도입 TF」를 구성 ('16년 상반기)
 - 관련 보험상품 출시 추진 ('16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

미래는 ...

불완전판매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금융소비 순과정(사전 정보제공 - 상품판매 - 사후 피해구제)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규제 적용
 - 6대 판매원칙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 근절, 과징금 등 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손해배상책임 등 피해구제 장치 마련
-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장치 강화(적합성보고서 도입, 금융회사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
-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판매수수료 공시 등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 금융소비자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 및 '생활중심' 교육 강화
- 자본시장의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회사의 창의성·자율성 강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보이스 피싱 등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민피해 증가
- 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로 선량한 피해자 발생 우려
 - 선의의 사기계좌 명의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정지 제도 개선 필요

미래는 ...

보이스피싱(그놈목소리),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발본색원

- '그놈 목소리' 추가공개, 지연인출제 정착유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내실화 및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단속/감독 강화
- 지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급정지의 종료/해지요건 신설로 선의의 사기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 도모
-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제거조의 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 범죄로 추가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추진
- 「전기통신사기 피해 및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 및 차단하겠습니다

현재는 ...

-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피해(보험금 누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인식으로 근절 곤란
 - 보험사기 관련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 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

미래는 ...

위장사고·보험금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처벌강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처벌·대응 강화 및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험사기죄 별도 규정
 -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지연·거절하는 경우 보험사 과태료 부과 및 조사업무 종사자가 취득한 정보누설시 형사처벌
- 보험사기 단속 강화 및 예방시스템 기능구축
 -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분석·집중감시 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운영
 -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강화
 - 보험사·공제의 통합 보험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체결부터 청구·지급단계까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기능구축



소외된 이웃,
그들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배려나누기

[장애인]

-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개선
- 권역재활병원 확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다문화가족]

- 다문화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사회적약자]

- 어르신·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맞춤형 진단검사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및 교사 관찰·추천제 내실화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 법률홈닥터를 2배 늘려 수혜계층 확대
-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 및 소득을 합산한 고용보험 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나눔기본법」 제정,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 대폭 개선
-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성과연계보상(SIB)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으로 확대

장애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현재는 ...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확보 및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특수교원 증원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 필요
 -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사의 지속 증원 필요
 -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58.6('13년) → 61.1('14년) → 62.8('15년)
 - 과밀 특수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필요

미래는 ...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
 - 부족한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 특수교사 증원 추진
 - ※ 특수교사 연도별 증원 계획 → 606명('16년) → 700명('17년) → 800명('18년)
- 과밀 특수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 특수학교(급) 신·증설 지속 추진
 - ※ 향후 5년간('16년~'20년) 특수학교 20교 이상 신·증설 추진
 - 특수학급 연도별 400학급 이상 설치
-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기대

감각 장애인의 자유로운 소비를 위해 제품 정보은행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보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롭게 본인 주도적인 소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대부분의 상품 광고는 시각적으로만 제공되고 있고, 제품 정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미래는 ...
-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 용량 등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은행 설립 및 관련 법 정비

장애인의 타지역·광역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 현재는 ...
-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인프라·제도·인식 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
 - 기존 장애인 이동 서비스는 콜택시 등 차량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나, 광역단위 타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움
 -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나,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3만여대 중 18.5%(6천여대)에 불과하며, 지하철 일부 역에서는 전동차와 승강장 높이가 달라 휠체어 사용시 사고 위험이 있음
 - ICT 발달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도 일반인에 비해 제한적임

- 미래는 ...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콜택시의 타지역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년~'21년 수립)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 운영기술을 개발
 - 휠체어 탑승 가능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보급 지속 확대
 -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각화
 - ICT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행지원시스템(App 등) 등을 조속히 개발
 - 휠체어 사용자 대상 이동 가능 지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병원 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질환·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기술 발전, 장애인의 권리 의식 강화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보장구 등 지원품목 확대와 지원 중인 보장구의 기준 금액 현실화 필요

- 현재는 ...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14년 현재 249만명(전체 인구의 약 4.9%),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로 장애인 건강 문제 심화
 - 재활의학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은 전체 병·의원의 약 3.4%이며('11년 국민보건조사 실태조사), 이 중 대부분이 전문재활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병원으로 장애인이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부족
 - '15년 현재 6개 권역(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에 권역재활병원 운영 중이나, 지역적 편중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12 제정, '17.12 시행)에 근거한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 지정 필요

미래는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개선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급여품목확대 : 맞춤형 휠체어,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 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 급여품목 추가 확대 계획
 -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지지위커, 이동식전동리프트기 확대
 - 기준금액인상 : '15년 조정품목* 이외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 및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단계적 인상 추진 계획

* 보청기, 맞춤형정용신발, 의안,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5개 품목 기준금액 조정('15.11)

미래는 ... 권역재활병원 확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으로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 권역재활병원이 없는 시·도에 권역재활병원 추가 건립(10개)을 통해 재활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
 - * 현재 권역재활병원 7개 선정·운영 중
- 장애인구수,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운영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권역재활병원 기능전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40여개소 지정 추진
-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강화하고 이를 통해 250만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 기대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다문화가족의 자녀세대의 증가, 특히 학령기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증가 등으로 학교 적응 및 진입 등을 위한 자녀 대상 지원 필요
 - 기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돌봄 지원 등이 위주이며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성발달 등의 서비스 요구 증가

미래는 ... **다문화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多재다능') 프로그램 추진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와 부모 대상 자아정체성, 사회성 발달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 제공
 - 운영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학교 적응력 제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성장하는데 기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다문화 사회 본격 전개로 지속적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
 -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 : 55,780명('13년) → 67,806명('14년) → 82,536명('15년)
 - 가정 생생 배경, 출생지 및 거주지, 거주 기간, 학교급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필요

미래는 ...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 선제적·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강화
 - 다문화 유치원 운영을 통해 일반 아동과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추가지도를 실시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통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실시
-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별 협력체계를 구축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다문화 교육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일상생활에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의 정보 격차 심화
 - 취약계층에 대한 전용단말기 보급으로 통신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특화서비스를 통해 치매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필요

미래는 ... **어르신·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의 안전 보장을 위해 웨어러블 전용 단말기 '안심팔찌'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전용 단말기 및 특화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규모 : 전국 17개 광역시·도 취약계층 2만여명에 대해 단말기 지급, 특화 서비스 개발, 서비스요금 지원 등

저소득층 영재교육 발굴기회 확대 및 학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영재교육에 대하여 소외자가 없도록 개개인이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교·영재학교 등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여 학비 및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미래는 ...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및 교사 관찰·추천제 내실화**

-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 ※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 : 2.46%('12년) → 3.81%('15년) → 5.5%('16년)
 -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영재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선발도구 개발·보급
- 표준화된 검사(창의성 검사 등) 선발방식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하여 교사 관찰·추천제 내실화
 - 체크리스트, 수행관찰 도구 등을 활용한 선발방법 정교화 및 다양한 선발도구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한 신뢰성 강화
 - ※ 관찰·추천 실시기관 비율 : 81.2%('13년) → 83.0%('14년) → 90.0%('16년) → 100%('17년)
-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과학교 사회적 배려자 입학생 학력신장 등을 위한 Bridge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야별 영재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 기회 확대로 흡수저를 타파하겠습니다

현재는 ...

- 상대적으로 해외유학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국비 유학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수혜인원 확대 및 해외유학 비용 증가에 따른 장학금액 현실화 필요
-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비유학 및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 충족 적격자 부족과 CEO의 추천 저조로 실적 저조

미래는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 예산 추가확보,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적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
- 석·박사 취득 기간 동안 약 2, 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16년 8명 선발 → '17년 50명 선발
- 현실적 제약이 다소 많은 장기 유학 지원과 병행하여 단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국비 유학과정을 개설하여 수요 활성화 견인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홍닥터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현재는 ...

- 요청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법무부가 직접 채용)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홍닥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
 - 현재 40명의 법률홍닥터 1명당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전국 약 8만 가구) 약 2만 가구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미래는 ...

법률홍닥터를 2배 늘려 수혜계층 확대

- 배치기관과 법률홍닥터의 의견수렴결과 1만 기초생활수급가구 당 1명의 법률홍닥터 배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 * 1명의 법률홍닥터 담당 기초생활수급가구 수 : ('16년) 2만 가구 → ('17년) 1만 가구
- 법률홍닥터 전국적인 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가능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높이겠습니다

- 현재는 ...
- 경력단절여성·청년·고령자 등이 복수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할 경우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
 -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수 수준이 적어, '적은 보험료 → 실업급여 등에서의 적은 혜택' 가능성 → 고용보험의 보장성 미흡 문제 → 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불리

- 미래는 ...
-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 및 소득을 합산한 고용보험 적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온전히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 허용 검토
 - 시간선택제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허용 → 개인별 합산적용 → 일한 시간에 비례한 고용보험 혜택
 - (현행)복수 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 불허 → (개선)복수 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 허용



교육급여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현재는 ...
- 수혜 대상자의 선정기준 완화로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의 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기회 확대 필요
 - 대상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수급자 현황 : 387,980('15.12 기준)

- 미래는 ...
-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제도를 몰라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 학생을 추가 발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급여* 적정화 추진
 - * 초등학교생 부교재비 연 39,200원,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92,500원, 고등학교생 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연 1,520,000원 지원('16년)
 - ** 매년 교육분야 평균 물가상승률 감안 인상 추진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기부금 규모는 크게 늘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
* 세계 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 60위
 - 복지수요 및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기부문화 육성, 특히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 필요

- 미래는 ...
-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나눔기본법」 제정,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 대폭 개선**
 - 장기적·일상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
 - 기부연금제도 도입(제도도입시 기부자 세액공제, 향후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추진)
 - 기부관련 기타 제도개선, 부처간·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념일 운영 등
 - 기부금품 모집의 사전규제 완화 등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제도 대폭 개선
 - 기부금품 모집 대상사업을 공익에 반하지 않는 모든 사업(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일부 허용, 연합체를 통한 모집 허용 등 모집방법 개선, 모집단체의 사후등록 신청 허용 등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사용기간 제한(2년 이내), 모집·사용내역 인터넷공개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기부자 포상 등 예우 강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성과연계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 증대,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재정 절감 필요
 - 선진국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발행하는 사회성과연계보상제도 활성화
* SIB : 약정에 따라 민간이 공공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복지 부문의 자금조달수단(*10년 영국에서 시행 후 11개국 45개 프로젝트로 확대)
 -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 현재 서울시 1호사업 투자자 모집 중, 경기도 1호사업 운영기관 선정 중

- 미래는 ...
-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성과연계보상(SIB)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으로 확대**
 - 한국형 사회성과연계보상제도의 활성화 추진
 - 대상사업 : 청년취업을 증대,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감소, 자살예방, 빈곤 예방·퇴치 프로젝트 등
 - 다양한 성과평가기법 개발 등 성과평가체계 마련,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방안 강구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중복이 없도록 자체재원을 활용한 SIB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지자체단위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에 확대 적용
 - SIB사업의 성과보상 재원 및 지급방안 마련 등 사회성과연계보상제도의 입법화(「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지친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합니다

희망사다리

- 고른 교육기회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사회안전망 제공
-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균형 실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운영·확대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 서민층 사교육비 연간 약 1,800억원 절감효과 기대
-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 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취약계층 자격증 취득시 응시로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1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도 및 학습동기 부여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근로장학의 형태로 시간당 9,500원 지원)'을 진행 중이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 약 4,000개 중 절반인 2,000개 정도만 대학생 멘토를 지원하는 실정임
-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은 저소득층,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확대 필요

미래는 ...

고른 교육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사회안전망 제공

- 사업규모 확대
 - 대상을 전국지역아동센터로 확대(2,000개 → 4,000개)하고, 센터당 대학생 멘토 인력(2.1명 → 5명) 및 근로시간(주당 4.6시간 → 6시간)을 확대
 - 지역아동센터 수용학생은 30명 내외로 학생 6명 당 대학생 멘토 1명 필요
-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른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사회 안전망 제공
- 대학생은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어 줄 아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 기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활성화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기업형 인재를 맞춤형양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K-MOOC에 개설 중인 강좌(27개)의 분야와 그 수가 적어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진 학습자의 수요 부응을 위해서는 개설 강좌 확대가 필요
 - K-MOOC 강좌 이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부족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강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MOOC란?
- 개념: 인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
 - 특징: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

- 현재는 ...
- '15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기업맞춤형반'은 총 1,048개반이 운영되어 10,719명의 학생이 참여 중으로 대기업 맞춤형반은 5.8%(61개반)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기업맞춤형반'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전문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참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취업맞춤반'을 운영한 학교의 취업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
- *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 취업률 추이: ('11년) 29.6% → ('13년) 41.5% → ('15년) 58.4%
-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통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도입 등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자리 매김 추진 중에 있음
- * 전문대학 전체 취업률: ('13년) 61.2% → ('14년) 61.4% → ('15년) 68.2%
- ** SCK사업 참여대학 취업률: ('14년) 64.6% → ('15년) 69.8%

- 미래는 ...
-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균형 실현**
- K-MOOC 개설 강좌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
 - 개설 강좌수 '15년 현재 10개 대학*에서 27개 → '16년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 *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유인 제공
 -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K-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용* 형태 확산
- *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Blended Learning),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학습부진·부적응학생 대상 반복학습 등
- 대학별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점 인정 강좌 시범운영
 - 개인 학습자의 자기 계발 활용 외에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원 재교육시, K-MOOC 강좌 활용 확대
- ※ 재직자가 K-MOOC 강좌 이수시,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받는 방안 추진

- 미래는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 운영·확대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 고졸자에게 관심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대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반을 전체 기업맞춤형반의 10%까지 확대
- * 현장 전문가 멘토링, 모의면접, 직무전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활용하여 고졸자의 실무능력 증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입·확대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취업맞춤반'에서 회계 등 사무직, 서비스, 농생명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에 기여
 -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 제정으로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대학의 장점과 국가·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세계적인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EBS-2TV(교육방송) 조기 실시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무료 지상파채널인 EBS-TV(교육방송)는 교양, 평생교육프로그램을 90% 이상 편성하고 있어 정작 서민층의 초·중등 교과목 및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완화시켜줄 학습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

현재는 ...

- 어릴 때부터 수학·S/W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



미래는 ...

서민층 사교육비 연간 약 1,800억원 절감효과 기대

- 무료 지상파 채널 EBS-TV(교육방송) 1개 추가
 -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신규채널(EBS-2TV) 조기 방송을 위해 방송법령 개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예산 확대 계획

미래는 ...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 전국 지자체에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 문제풀이식 주입식 학습이 아닌 체험을 통해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수학체험관을 전국 지자체에 설치·운영
 - 수학체험관 내에 소프트웨어 교육관 등도 함께 설치하여 창조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중교육 기반 구축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으로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 현재는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하나, 짧은 재직기간 등으로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
 - 직업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을 취약 근로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및 취약계층 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수월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래는 ...
- 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 청년 등을 중심으로 훈련지원비 증액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기존 1인당 1년간 2백만원(5년간 3백만원)에서 3백만원(5년간 5백만원)으로 증액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 청년 취약계층의 실훈련비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증액
 - 야간·주말 훈련 제공, 인터넷훈련 등 비정규직 훈련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 과정 개설 추진
 - 비정규직 등 7만 9천명, 1인당 약 1.9회 훈련 참여('15년) → 비정규직 등 10만 명, 1인당 약 3회 훈련 참여 예상('17년)

청년 취약계층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청년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취업준비 과정에서 사교육비 등 비용 지출 증대
 - 특히 청년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와 취업준비를 병행해야하는 관계로 경제 여건 상황이 더욱 어려움



- 미래는 ...
- 청년취약계층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지원**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중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검정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층(15세~3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 지원방안 : 지원대상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수수료 지원
 - * 기술·기능분야(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급) 및 서비스 분야 자격증
 - 시행시기 : 법령 개정 및 소요예산 확보를 감안하여 '17년부터 시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개정
 - 청년 취약계층이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경감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양질의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세계 속의 대한민국 브랜드를 활짝 꽃피웁니다

문화융성

- 맞춤형 문화복지로 문화사각지대 해소,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 문화·관광·콘텐츠·ICT가 결합된 올림픽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국민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설치
- 권역별 게임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 「체육인복지법」 제정, 체육연수원 건립
-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
- 1문화재 1생생문화재사업 실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문화복지를 강화하여 문화융성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현재는 ...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야의 다양화 및 참여율 제고 필요
 -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인당 5만원)을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
-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미래는 ...

맞춤형 문화복지로 문화사각지대 해소,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분야를 체육, 관광, 한식 등 문화 전반으로 확대
- 문화가 있는 날을 생활 속 문화활동으로 확대
 - 생활문화센터를 동호회 활성화 거점 공간화,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학교, 직장, 군부대 등 1인 1기 확산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확대 및 이용분야 다양화
 - 카드 이용 불편자(장애인, 고령자, 격오지 주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가맹점 확대
 - 여행·스포츠 분야 이용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 장애인형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 시·도별 1개소 확보(11개소 건립 완료, 향후 5개소 건립)
 - 문화공간, 영화관,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는 근린 체육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는 ...

-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준비 현황
 - 경기장 : 6개 신설 경기장 평균 공정률 51%, '17년 말까지 단계적 완공
 - 대회 교통망 :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 '17년 말까지 완공
 - 문화, 홍보 : 개폐회식 관련, 총감독 선정('15.7), 감독단 구성('15.9), G-1000일 계기 서울·개최도시 문화행사 및 슬로건 공개('15.5), 개최지 특성화 및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현재는 ...

-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전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체육복합시설을 우선 확충함으로써 체육서비스 비혜택 지역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에 설치된 국민체육센터는 1개 시·군·구에 1개로 일률적이며 현지 주민들의 이동거리, 지역별 체육시설 현황·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공 체육시설 비수혜지역 및 과밀해소지역이 존재
 - 체육활동을 위한 주 이동수단은 도보(66.4%)이며, 체육활동 장소까지 이동시간은 대부분 15분 이내(61.1%)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 필요

미래는 ...

문화·관광·콘텐츠·ICT가 결합된 올림픽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전통·문화·예술·ICT가 결합된 평창체험관 운영으로 관광발전에 기여
- 개최도시 1시간 1문화행사, 겨울축제,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 경기장, 선수촌, 개폐회식장, 메인프레스센터, 국제방송센터 등 차질 없는 건립 지원
- 국제심판·IOC·IF 주요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를 통해 경기운영인력 양성
- 경기력 향상 : 전 종목 출전(130여명), 메달 20개(금8), 종합 4위 목표 추진
- 단순한 스포츠이벤트가 아닌 문화·관광·콘텐츠·ICT 올림픽 추진으로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위상 제고

미래는 ...

국민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설치

- 국민체육센터 규모를 축소한 근린형 거점 체육시설 모델을 국민체육센터 비수혜 지역과 중·소도시 우선 지원
 - 공공체육시설 GIS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거쳐 비혜택 지역과 과밀 해소 지역에 설치
- 시설내역 :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배드민턴, 탁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 스포츠복지 비혜택지역인 읍·면·동 지역 내 근린형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전 국민이 스포츠가 있는 삶을 향유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복지비 부담 축소에 기여

지역기반 게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최근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게임산업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필요
 - 국내 게임산업은 '09년~'12년간 평균 14.9% 성장하였으나 게임 중심 플랫폼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13년~'14년간 평균 성장을 2.8%로 둔화
 - 서울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게임산업 장기성장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미래는 ...
- 권역별 게임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별 특화된 게임산업 집중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등을 통한 게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지역 게임산업 현황, 성장잠재력,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거점별 특성화된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지역기반 중소게임기업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현지화 및 마케팅 지원, 공동전시관 운영 등)
 - 지역기반 게임산업 발전 가능성이 확보된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 ('15년도) 3개 권역 지원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전북권)
 - ('16년도) 3개 권역 지원 (광주·전남권, 대전·충청권, 경기권)

체육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체육·스포츠인의 생활 여건 개선 필요 및 체육계 원로·체육인의 복지 및 진로 지원 사업의 미비
 -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체육특기자들의 경력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어 단절 예방 필요
 - 체육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원 필요
 - 국민의 스포츠참여 증가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 행정가 등 중장기적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과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 증가

- 미래는 ...
- 「체육인복지법」 제정, 체육연수원 건립**
-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체육인에 대한 복지 제도화
 - 체육활동 지속을 위한 경력단절 대책 마련
 - 체육특기자들이 병역의무 중에도 경력단절 없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체육단 등 정원 확대
 - 운동선수들의 현실적인 군복무 연기제도 마련, 운동병과 신설 등 대책 마련
 - 체육인 대상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 과정 강화
 - 체육인 교육·연수시설(가칭, 체육연수원) 건립
 - 체육인 및 국제체육인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심포지엄 기타 행사 개최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 시책 수립 의무 명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국민 누구나 무료로 미디어 체험 및 교육을 받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제작 장비·시설도 무료로 대여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6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
 - ※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등 6개 센터 운영(울산: '16년 하반기 개관 예정)
 - '15년 6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44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 공공 인프라,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

미래는 ...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

- 방향: 지역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센터를 구축
 - 대구,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우선 구축하고 향후 확대
- 지역 간 차별 없는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 인프라 구축
- 시청자의 방송참여도 활성화되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



시도지정문화재 보존·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시군구별 1개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
 -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향유·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재를 통한 역사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지역주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필요
 - 일상적·사전예방적 문화재관리사업(청소, 예초 등)인 '문화재돌봄사업'이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이 심히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재돌봄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문화재를 대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는 실정
 - '문화재돌봄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경미한 문화재 훼손을 단시일 내에 보수하여 훼손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미래는 ... 1문화재 1생생문화재사업 실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 단계적으로 '지자체 1생생문화재사업' 실시, 장기적으로 '문화재 1생생문화재사업'으로 확대, 서원향교문화축전·산사문화축전·관아종가문화축전·문화재 야간행사 프로그램 신규 및 확대 개최
- '문화재돌봄사업' 대상을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로 확대, 특히 보존기반이 부실한 종중·문중·폐사지 소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시 관리를 강화

2022 미래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변화도 개혁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긍심과 긍지로 새롭게 도전해봅시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여성도 우리 아이도 모두 안전합니다

국민안전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 설치
- 순찰에 필요한 기초 경비 지원 확대 및 젊은층 참여 확대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 우범자 소재 파악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근거 법제화
- 신고문화 활성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 정부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국민편의제고
- 뒷골목, 우범지역 등에 CCTV 확대 설치
- 시민의 수면권·평온권을 침해하는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추진
- 주택가·상가 주변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기준 완화
-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 확충
- 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
- '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 육상·해상 특수구조대,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 확충
-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보호
-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 훈련장 구축 및 R&D 투자 확대
-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
- 유아·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

- 아동학대 신고는 '12년 10,943건 → '13년 13,076건 → '14년 17,791건 → '15년 18,9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우리나라 1천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1.1명 수준으로 미국(9.1명), 호주(17.6명)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 병원·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가 많아 종합대책 마련 시급

미래는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
-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 아동 상담,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 교육,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및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학대까지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 설치 추진
- 예비부부부터 출산, 학부모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체계적인 지원
-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 : 총예산 대비 0.0047% → 0.1% 수준
-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아동 대상 폭력이 지속됨에 따라, 폭력예방활동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미래는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확대
 -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시설 및 돌봄비용·간병비·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 지속 확대
 -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자 교육
 - 가정폭력 피해아동 사이버상담실(반디톡톡) 1366 지역센터(17개소) 확대 운영
-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체계 강화
 - 지역 내 여성폭력예방활동 거점센터 지정(신설) 및 통합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확대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성교육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농산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중심으로 신규 설치
 - 여성폭력예방교육강사 국가자격증화 등을 통해 여성·아동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및 전문화 도모

치료받을 수 있는 스마일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범죄피해자의 치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가 전국 8개소 설치 운영 중, 강력사건 피해자 중 6%(‘14년 기준)에게만 시설이용이 제공되어 대다수 범죄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 범죄피해를 당하고 심할 경우 2차 피해(자살 등)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전문심리 치료기관으로서 스마일센터 서비스 전국 확대가 필요

미래는 ...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 설치

-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 지역별 인구수, 강력범죄발생률 등 심리치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 ('16년~'19년, 총 10개소 추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시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 예산을 우선 반영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여 가겠습니다

현재는 ...

- 전국 읍·면·동별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원(105,726명, '16.1)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이긴 하지만 조직 성격상 일정한 근무(인당 2주 1회, 2.8시간 순찰)가 불가피함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 안전조끼, 후레쉬봉 등 안전장비 및 방한용품 지원: '16년 예산, 약 11억원
간담회비: 2천만원(지구대별 연간 5천원 수준)
- 참여 연령층도 대부분 40대, 50대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미래는 ...

- 순찰에 필요한 기초 경비 지원 확대 및 젊은층 참여 확대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 순찰활동에 필요한 기초 경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 지원 확대, 간담회비 지원예산의 현실화
 - 대학생 등 20대, 30대의 젊은층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의 역량 강화
 - 전국 100여개 경찰관련학과 설치 대학과 협력, 순찰 활동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경·학 학점제 프로그램 확대(현재 20개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 중임)
 - 대학생 등 젊은층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
 -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대학생 등 젊은층의 참여 확대로 방범 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

재범 우려가 높은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직접적인 근거 법 조항 없이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규정과 우범자 관리 규칙(예규)을 근거로 운영
 - 대상 죄종: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 조직폭력(8개 죄종)
- 법적근거 부족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우범자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 수집이 어렵고, 소재불명의 우범자는 통신자료 확인 등 법원 영장 없는 수사 불가능
 - ※ '15.12 기준: 우범자 39,308명 중 소재 불명자 4,133명(10.5%)

미래는 ...

- 우범자 소재 파악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근거 법제화**
 -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경찰관의 질문 등에 대한 우범자의 협조 의무 및 경찰의 우범자 자료수집 권한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우범자 관리 기반 마련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우범자의 소재발견과 실질적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권한 확보
 - *우범자심사위원회(법조인, 시민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구성하여 조사권 남용 및 인권 침해 방지
 - 경찰·검찰·보호관찰소·교정시설 등과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체제 구축
 - 법 개정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손쉬운 스마트폰 신고, 자원봉사로 인정하겠습니다

현재는 ...

- 아동학대, 기초질서 위반 등의 근절을 위해 신고가 필요하지만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원봉사 참여율은 '13년에 비해 1.7%p 감소('15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미래는 ...

신고문화 활성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를 도입
 -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문턱을 낮춰 국민들의 관심 제고
- 자원봉사 인정 기준을 시간에서 횟수로 확대 개편(1365자원봉사포털)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등 '마이크로 자원봉사' 인정체계 마련
-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 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
 - 공공기관(행자부 1365자원봉사포털, 복지부 VMS, 교육부 NEIS, 여가부 DOVOL)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수용하는 폭넓은 자원봉사 실적관리 네트워크 구축

국민불편, 110에서 응답하겠습니다

현재는 ...

- 부처별 콜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움
 - 인지도가 높은 112와 119의 경우 비긴급 민원전화가 많아 긴급전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 국민불편 해소 및 긴급 상황 우선대응 위한 정부 민원상담전화 일원화 추진 필요

미래는 ...

정부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국민편의제고

- 정부 각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와 110번 연계 지속 확대 추진
- 비긴급 신고전화의 110 연계 추진
 - 국민안전 관련 20개 신고전화를 긴급콜(112·119)과 비긴급콜(110)로 이원화
 - '16년 7월부터 비긴급 신고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상담원 125명) 신설·운영 개시
- '17년부터 110콜센터를 공휴일(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에도 운영
- 회선 증설 및 상담원 증원 등을 포함한 상담인프라 확충

우리 가족이 밤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전국적인 강력범죄 발생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
 - 전체 범죄는 감소('07년 1,836천건 → '14년 1,778천건, 3.27% 감소)한 반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크게 증가
 - * '07년 약 52만건 → '14년 약 58만건(11.5% 증가)

- 미래는 ...
- **뒷골목, 우범지역 등에 CCTV 확대 설치**
 - 뒷골목 등 우범지역, 여성안심구역(전국 435개소) 등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운영
 - * CCTV 설치 후 지역별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
 - CCTV 효과 분석 결과, 5대 강력범죄의 감소(26.6%)와 주민의 불안감 감소 효과 뚜렷



밤잠을 설치게 하는 심야시간 집회는 금지시키겠습니다

- 현재는 ...
- 종전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09.9 이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 지연으로 야간집회 전면 허용
 - 도심 휴식공간인 공원이나 광장 등에 집회신고 후 노숙투쟁, 플래카드·천막 등의 장기간 설치로 시민불편 가중 및 도시미관 저해
 - 타 법에서도 야간금지 규정이 있고 주요 선진국도 제한
 - ※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 제한), 「국민투표법」 제47조(야간연설금지) :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

- 미래는 ...
- **시민의 수면권·평온권을 침해하는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추진**
 -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야간 집회시위 제한 자체가 위헌은 아니고, 집회 기본권과 국민 수면권 등을 비교하여 직장인·학생의 집회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야간집회를 일정부분 제한하라는 것임
 -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 법 개정사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허용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우리나라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높아 교통안전 대책이 긴요
 - 특히, 주택가·상가 주변의 좁은 도로(폭 9m 미만)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14년 기준 53.5%) 발생으로 대책 시급
 - 또한 현행 횡단보도간 이격거리(200m) 규정으로 대도시에서는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현재는 ...
-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14.1)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오류 등의 경우에 한해 정정만 가능함
 -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15.12.23)

- 미래는 ...
- 주택가·상가 주변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기준 완화**
-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30km/h 제한을 주택가·상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도 적용하는 생활도로구역 제도를 법제화 추진
 - ※ 현재 지침으로 생활도로구역을 운영('15년 기준 259개소) 중이나 인식 부족으로 실효성 미흡
 - 횡단보도 설치기준(이격거리)을 완화하여 도심부 이면도로 등 무단횡단이 잦거나 횡단수요가 많은 곳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법 개정사항 : 「도로교통법」 개정(생활도로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횡단보도 설치기준)

- 미래는 ...
-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변경절차 : 변경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 변경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가 인정되는 자
 - 심의기구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법 개정사항 :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신체적 위해 등 2차 피해 예방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

- 소방관, 경찰관은 직무환경의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로 고통받을 확률 높음
 - 소방관의 경우 연평균 7.8회 정도 극심한 외상사건에 노출되며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자 급증, 전체 39% 수준은 PTSD·알코올장애·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
 - '13년 고용정보원의 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직업 700개) 경찰관이 가장 높음
- 현재 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

현재는 ...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지역별로 안전 취약요소에 부합하는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안전 사회 추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
 - '15년부터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각종 안전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안전지수를 공표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

미래는 ...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 확충

- 심리장애를 사전예방에서 사후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사전예방책으로 심신안정실,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 사후치료책으로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지원 강화, 트라우마센터 확충
-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확충
 - 소방 : 심신안정실 '15년 131개소 → '20년까지 1,350개소
심리상담실 '15년 30개 소방서 → '20년까지 205개 소방서
 - 경찰공무원 : 트라우마센터 '15년 4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 '20년까지 전국 18개소(서울·경기 각 2개소, 그 외 14개소)

미래는 ...

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

- 자치단체 주도로 UNISDR(유엔재해경감전략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도록 정책패러다임 전환 추진
 - 도시의 재해위험 경감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및 시민의 인식 제고
 - 지자체별 자발적 재해예방활동 유도, 각종 도시개발 계획에 재해위험경감을 반영,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촉진
-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
 - 지자체가 10가지 핵심요소(10 Essentials) 이행 계획 제출 → UNISDR 심사를 거쳐 국제안전도시 인증
 - 전 세계 85개국 약 1,100개 도시 캠페인 참여('15.12 현재)
 -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행정 지원 및 인증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재난 발생시 모든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통신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지와 바다,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하여 안전하게 구조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국가 전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서의 통합대응체계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완료가 매우 중요

- 현재는 ...
-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수구조대를 설치·운영 중
 - 육상 : 4개 119특수구조대(경기 남양주, 대구, 전남 장성, 충북 충주)
 - 해상 : 3개 특수기동대(부산, 동해, 목포)
 - '15년에 조직체계는 구축하였으나, 청사 등 시설과 헬기 등 출동장비, 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는 여전히 부족하여 조속한 시설·장비의 보강 필요

- 미래는 ...
- '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 군,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통신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및 즉각 대응성 확보 추진
 - 재난발생 초기 신속한 협업과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기반 마련
 - 재난현장 영상 및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구축
 - 현장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원기능 강화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단계 :
 - '15년 : 강원도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
 - '16년 : 9개 시·도(충남, 전남, 경북 등)
 - '17년 : 서울·경기,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등)

- 미래는 ...
- 육상·해상 특수구조대,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 확충**
- 특수구조대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에서의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 개선
 - 육상재난 : 119 특수구조대
 - * 임시 청사(광주, 천안)를 활용하고 있는 호남, 충청·강원특수구조대의 전용 청사 설치
 - * 현재 보유헬기 4대를 구조대별 최소 2대(총 8대 이상) 확충
 - * 출동차량, 구조장비, 개인장비 등 출동 필수장비 보강
 - 해상재난 : 특수기동구조대
 - * 출동 헬기(현재 1대 보유) 최소 2대 이상 확충
 - * 고속구조보트, 심해잠수장비 등 첨단장비 보강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특수첨단장비 등이 부족한 시·도 소방본부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하청근로 위험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작업에만 한정되어 질식 등 다른 위험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산업재해를 유발
 - '15.1.12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질식사고로 3명 사망
 - '15.4.30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질식사고로 3명 사망
- 하청근로자 안전작업 관리 미흡
- 원·하청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을 협의·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작업 내용과 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현장에서는 미흡
 - 도급계약시 안전관리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노무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어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

미래는 ...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보호

-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 제공범위를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16년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국회제출 계획
- 하청근로자 안전작업 매뉴얼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원·하청 간 위험작업 조정 등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개발·보급
 - 안전관리 비용이 반영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이버보안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

- ICT, 금융, 제조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사이버안전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미래는 ...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 훈련장 구축 및 R&D 투자 확대

-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 및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바우처 제도」 도입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 의료, 에너지 등 분야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지원 강화
-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침해사고 재구성 및 모의해킹 실험 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 보안 훈련장(Security-GYM) 구축 등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연계 보안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확대
-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보안 기술개발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공공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안전 R&D 투자 확대
 - 국가·공공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및 유망 신기술과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융합·사회문제 해결 등 3대 R&D 확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원전 인·허가 과정 등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보공개 등 안전관리 투명성 요구 지속 증가

현재는 ...

- 최근 인터넷상의 대다수 불법·음란정보가 해외사업자(SNS, 텀블러, 구글 등)를 통해 급속 확산됨에 따라 국내 ISP 사업자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차단에 한계
 - 최근 워터파크 몰카 및 소라넷 등의 개인 성행위 영상 등 권리침해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



미래는 ...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 방사능 재해로부터 신속히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 향후 원전 해체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체계 완비
-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새롭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 원전 관리·운영체계의 근원적 개선 및 원전에 대한 안전 심·검사 강화를 통해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및 방사선직업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원전 운영부터 해체까지 전주기적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 완비
- 원자력 안전관련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방식으로 전환 등 대내·외 소통 역량 강화

미래는 ...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차단수단 보급 의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휴대폰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유해정보 차단수단(예 : 네트워크 차단 등) 적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방안을 추진
 - '15년 12월 말 현재 청소년 휴대폰가입자는 약 407만명으로, 이 중 차단수단 설치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15.4.16~) 이후 약 158만명임
- 인터넷방송, SNS 등 국내·외 주요 포털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활성화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로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사용 연령이 유아·초등학생 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악성댓글, 유언비어 등 사이버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



미래는 ...

유아·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 부모와 함께하는 윤리교육(가칭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개발·운영하여 자녀에 대한 인터넷 역기능 피해예방 교육 및 이용습관 지도 강화
- 유아·어린이 및 학부모·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바른 인터넷 창작 동요제' 개최
- 인터넷윤리 체험관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활용한 유아·초등학생 대상 학교 밖 체험활동 확대
 - 선플달기, UCC제작, 게임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확충
- 지속가능한 인터넷역기능 해소를 위한 공동 구심체 필요에 따라 민간 중심의 공익법인 설립 추진
 - 인터넷문화 학술 연구, 인터넷문화 아카데미 운영, 인터넷 문화운동 및 홍보, 공익활동 및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환경안전

- 어린이·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질약 체계 구축
-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및 정비 추진
-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비오톱 조성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를 직매입제로화 실현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어린이·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성인에 비해 빠른 신진대사와 신체적 미성숙으로 환경오염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 특히, 국내 어린이의 경우 혈중 중금속 농도가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
 - ※ 6세~11세 어린이 혈액 내 납 농도($\mu\text{g}/\text{dl}$) : 한국 1.26, 미국 0.84, 캐나다 0.79 (어린이·청소년 환경노출과 건강실태 조사사업('12년~'13년), 국립환경과학원)
- 기후변화에 따른 노령인구 건강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삶 확보를 위한 배려 필요

미래는 ...

어린이·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어린이 대책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 안전관리 강화
 - 활동공간 :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우수시설 환경안심인증
 - 용품 : 유해물질 실태조사, 기준초과 용품 판매차단 및 수거 조치, 제조업체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지원 및 저감 컨설팅(90개소/년) 추진
- 환경성 질환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및 부모 대상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어르신 대책 : 어르신 활동공간 생활환경 진단, 개선, 환경유해물질 노출과 노인 질환간의 인과관계 조사·연구를 위해 노인질환 분야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운영('17년)

환경오염피해를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16.1)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적기반 마련 완료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행 필요

미래는 ...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16년 7월부터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상 등인 경우 국가가 배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환경오염피해 유발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
 - 원인불명, 무자격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구제(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 환경책임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안전관리 능력 제고 유인
-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환경오염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의 유형,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제급여 관련 조사·연구 활성화
 - 원인자 미상, 부존재 등으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노후상수도를 개량하여 안전한 물공급과 가뭄을 극복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전국 지방상수도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상수관로 30.6%(55,312km), 정수장 58.8%(286개소)로 조사
 - 郡지역 누수율은 27%로 대도시(5.1%) 비교 5배 이상, 전국 누수량(6.6억㎥, 손실액 5,500억원)은 팔당호 저수량의 2.6배에 달함
 - 이상가뭄 현상의 빈번한 발생 및 장기화로 물 부족 문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미래는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절약 체계 구축**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상수관로, 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 '16년 시범사업(2개소 40억원) 후, '17년부터 단계적 사업 추진
 - 누수저감으로 유수율 80% 이상 달성시, 수자원 3.5억㎥/년(팔당호 저수량 1.4배에 해당) 절약 가능
- 가뭄대비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시스템 구축 등 취수원 다변화 추진
 - 식수전용저수지, 하천복류수댐, 관로비상연계·복선화 등 가뭄 취약지역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
- 물 수요관리 목표제 강화 및 절수형 제품의 설치 의무대상 확대로 물 절약 체계 구축

싱크홀 방지를 위한 하수관 정비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심 속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도심지역 지반침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필요
 -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최근 4년간('12~'15.7) 총 167건의 지반침하 발생

- 현재는 ...
-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콘크리트화, 녹지공간 감소 등에 따라 건강한 생태휴식공간의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욕구, 쾌적한 도시환경, 생태학습·체험 등 자연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미래는 ...
-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및 정비 추진**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 대형 공사장 인접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 ('15년) 90개 지자체 대상 약 9,582km 노후관로 조사 실시
 - ※ ('16년) 49개 지자체 대상 약 7,000km 노후관로 조사 실시
 - 하수관로 측정·진단기술 개발 및 활용
 - CCTV 조사결과와 연계, 하수관로에 최적화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 및 진단 기술 개발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 하수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파손, 누수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하수관로 교체·개보수 추진

- 미래는 ...
-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비오톱 조성**
 -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거나 방치·유 휴된 공간을 생태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도시의 생태거점 및 휴식공간인 자연마당, 도시 어린이의 자연놀이공간인 생태 놀이터,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한 비오톱 조성 등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환경과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책 추진 필요

현재는 ... ■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달성을 위해 교통, 생활환경 분야의 감축노력 극대화 필요
■ 천연자원은 부족하고 좁은 국토에 매립장 확보는 어려워 더 늦기 전에 매립 제로화·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전쟁시대 대비 필요

미래는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내 대기질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추진(~'20년)
■ 오염의 50%~70%를 차지하는 3대 국내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축 정책 추진
-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24년, 200만대) 확대
-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72개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17년)
-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의 미세먼지 관리규정(안) 마련 등 생활오염원 관리
■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중국 내 제철소에 저감시설 설치, 공동 연구 등 협력 강화

미래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 온실가스 감축: 비산업부문 사업장(가정·상가·학교 등)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노후 시설 교체 유도
■ 친환경차 보급: 친환경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급, 구입단계 세금감경
■ 매립 제로화·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환경성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
-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며 재활용 촉진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근로자 안전관리 및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만, 건설현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는 미흡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재
 - 국내 연평균 발생하는 재해 손실액은 약 6조원, 건설공사 목적물 피해금액은 약 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6.6조원 중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재해 손실 비용은 약 90%에 달하는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 감리 비대상인 200억원 미만 공사 대부분이 지자체 발주 공사
 -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미래는 ...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 방안 마련
 - 건설 안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지자체 지원 강화



새로운 한반도 시대, 단호하고 굳건한 안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튼튼안보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굳건한 대북 안보체계 확립
- 장병 의료지원체계 문제점 해소로 장병 삶의 질 향상
- 인생을 계획성있게 설계하도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 가능한 여건 조성
- 군복무 기간이 발전기·재도약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훈련수당 현실화함으로써 예비군들의 부담 경감
-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4년간 10만원 인상 및 진료비 감면을 확대
- 국가위상 제고 및 한류 확산, 수출증대에 기여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

-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안보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감안,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속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 구축 필요성 대두

미래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굳건한 대북 안보체계 확립

-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북 제재조치 시행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외교 전개
- 미국, 중국 등 주변 4국을 대상 능동적 실리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고화
-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한·미 동맹의 억제·대응능력 발전
 -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다중방어 대응체계 구축
 -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구체화 및 발전
- * 4D 작전체계 :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 국지도발 및 전면전시 초기 필수 대응전력인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L-SAM 연구개발 등

국민이 신뢰하는 장병 의료지원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이 제한적으로 일부(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발생 불가피 (신의료기술, 선택진료, 무통주사 등)
 - 본인희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부담 및 보장구 지원 금액이 낮음
 - 민간병원 진료시 공무상 진료비 선납 등 요양비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혼선 발생
 -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미흡

- 미래는 ...
- 장병 의료지원체계 문제점 해소로 장병 삶의 질 향상**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지원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30일 → 완치시)에 따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 '16년 3월 30일
 - 공무상요양비 지원범위 확대 및 보장구 지원 금액 인상
 -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시 공단부담금 지원
 -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 간소화 및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도입, 전·공상 심사 효율화
 - 국군외상센터 설립 및 의료 인력 확대, 원격진료 확대

현역병 입영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는 ...
- '12년~'16년 남자인구는 최대 규모로 금년도 5만여명 적체 발생(미해소시 '22년까지 최대 21만여명 적체 전망)
 - 향후 입영적체 요인은 증가되는 추세
 - 국방개혁에 따라 병사 정원이 '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므로 입영적체는 가중
 - 최근 청년실업을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 급증

- 미래는 ...
- 인생을 계획성있게 설계하도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 가능한 여건 조성**
- 당정협의('15.10.27)를 통해 마련한 적체인력 해소대책 적극 시행
 - '16년 및 '17년 각 1만명씩 추가인원 입영조치
 - 산업기능요원 확대 : 기존 4천명 + 2천명 이상(총 6천명 이상)
 - *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출신에 한해 한시적('16년~'18년) 확대조치
 - 장병 신체검사기준 강화로 현역자원 정예화(年 2만여명)
 - 고퇴 이하자 보충역 처분(희망자는 현역입대 가능토록 조치)
 - 상기 조치를 통해 금년도 약 4만여명 적체 해소
 - '17년까지 상기 대책 적극 시행으로 '18년 입영적체 완전해소

군복무가 생산적이면서 좋은 경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
- 군복무가 인생의 단절기·정체기가 아니라, 발전기·재도약기가 될 수 있기를 대부분의 장병 및 부모들이 기대
 - 다수의 병사가 대학 재학 중 입영하므로 학업의 단절현상 발생
 - 대학 미재학 병사도 검정고시, 자격증 등 취득기회 제한

- 미래는 ...
- 군복무 기간이 발전기·재도약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학 재학 중 입영한 병사를 위한 원격강좌 확대 및 군 교육기관 수료자에 학점 인정대학 확대 추진
 -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 확대 추진, 군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인정 대학 확대 추진(현재 70개 대학 참여 중)
 -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 추진 : '17년 말 목표
 - 국방부 + 교육부 공동연구 추진, 대학별 학칙에 반영('17년 하반기)
 -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검정고시 응시기회 및 대학 학위취득(독학사) 관련 온라인 학습콘텐츠·교재 및 학점은행제 지원
 - 어학,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 개인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e-러닝 콘텐츠 지원

동원 및 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이 실소요 경비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비에 대한 불만 및 부담 가중
 - 실소요 경비 : 평균 2.2만원, 현 보상비 : 1.2만원
 -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실비수준의 보상은 긴급함

- 미래는 ...
- 훈련수당 현실화함으로써 예비군들의 부담 경감**
- 순차적 증액을 통해 '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 예비군훈련에 대한 적정 보상을 통해 평소 적극적인 훈련참여 보장 및 국가위기기 자발적 참전 의지 제고 가능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현재는 ...
- 대한민국을 지킨 6.25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로운 생활보장 필요, 특히 국가에 대한 공헌과 남은 여성(평균 연령 85세)을 고려시 의료보장 확대 필요

미래는 ...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4년간 10만원 인상 및 진료비 감면을 확대**

-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지속 인상
 -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상실 및 기대여명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상
 - * 참전명예수당: '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인상
 - * 무공영예수당: '16년 현재 월 26만원~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인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 추가지원(월 5만원)
- 진료비 감면을 확대(60% → 80%)
 - 6·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남은 여성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요구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확대 추진
 - 전액 국비지원 대상인 상이 1급~6급과의 차별화와 타 국가유공자(무공·보국수훈자, 유족 등)와의 진료비 감면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수준 결정
 - 신체적 희생도가 미약한 상이 7급 수준인 80% 감면율로 확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

“매력 한국”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는 ...
- 평화안보, 개발, 인권 등 유엔 3대 분야 주요기구 의장직 진출 등 글로벌 이슈 처리에서 우리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추진
 -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류 확산, 수출 증대를 위한 공공 외교 전개 필요성 시급

미래는 ... **국가위상 제고 및 한류 확산, 수출증대에 기여**

- 평화안보, 개발, 인권, 대테러, 보건, 기후변화, 문화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 우리의 기여도 확대
 - * '16년 중 10개 국제기구 의장직 진출
- ASEAN, ASEM 등 다자협의체 지역기구와 협력 강화
- 인도주의의 외교 브랜드화
 - 국익과 인류애에 기반한 KOICA의 개발협력 강화
- 지역별 맞춤형 공공외교사업 전개와 정책 공공외교 확대
- 글로벌 한인·친한 네트워크 확대
 -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후손 대상 한국 홍보·서포터스 세력 확산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준비

- 이산가족 정체성 제고 및 교류채널 다각화 기반 조성
- 「북한인권법」 시행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촉구
- 탈북민 자녀양육 지원은 물론 취업, 교육 등 지원 확대, 남북통합문화센터 조성
-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실질적 통일준비
-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실시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는 ...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절반인 6.5만여명이 이미 사망, 연평균 4,000명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등 고령 이산가족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미래는 ...

이산가족 정체성 제고 및 교류채널 다각화 기반 조성

-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고향과 가족을 잃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 이산가족 관련 사료 수집 및 보존, 캠페인, 이산가족 소식지 발간 등
 - 이산가족교류협의회 운영, NGO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해 민간협력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 권역단위 이산가족 초청행사, 독거이산가족 지원·봉사 등 이산가족 위로 사업 추진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생사확인 및 상봉,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채널 다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류단체 지원 강화
 -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시, 설·추석 성묘를 원하는 이산가족 대상 고향방문 추진도 검토

통일을 함께 완성해 나갈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탈북민 자생력 향상을 위해 취업·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북한주민들이 처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증대
 - UN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안보리의 북한인권 문제 의제화, UN 내 북한인권 전담 기구 설치
 - 우리는 '16.3.2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 '16.9.4 시행 예정

- 현재는 ...
- 정착지원 역량을 지속 확충해온 결과, 탈북민 정착 주요 지표는 점차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존
 -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강화 및 탈북민에 대한 사회통합기반 확충을 위해 취업·교육 기회 등 확대 필요

- 미래는 ...
- 「북한인권법」 시행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촉구**
- 「북한인권법」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
 - 북한인권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
 -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후 안정적인 사회통합 견인
 -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촉구
 - 유엔 인권서울사무소를 주축으로 국제사회, 국내 북한인권 민간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내외 공론화 및 지지층 확대

- 미래는 ...
- 탈북민 자녀양육 자원은 물론 취업, 교육 등 지원확대, 남북통합문화센터 조성**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일반 탈북민 자녀와 동일한 자녀 양육 가산금 지원
 - 정부, 민간, 공공분야 탈북민 채용 지속 추진
 - 탈북 중·장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영농지원 패키지, 미래행복통장 가입 확대
 - 청소년 교육: 맞춤형 학습 멘토링, 진학지도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통일미래 인재로 육성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발전, 탈북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HOPE)·한미취업연수프로그램(WEST)·메르켈 프로젝트 등 확대·운영 및 맞춤형 언어교육 확대
 - 남북통합문화센터를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

통일준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와 온국민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1020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통일담론으로 '통일대박' 제시 이후 사회 각 분야의 통일운동 확산
 - 분야별 사업추진을 체계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

현재는 ...

- 통일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할 대학도 취업난 등으로 통일문제에 무관심
 - 대학생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북한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대학의 통일교육 강화 필요

미래는 ...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실질적 통일준비

-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연구·정책대안, 정책사업, 공감대 형성사업(예: 문화 행사, 통일교육) 등 분야별 통일준비 활동성과 공유 및 사업·홍보 공동 추진
- 생활친화적 통일콘텐츠를 활성화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하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 통일문화예술제 개최 및 기존의 통일박람회, 통일문화주간 확대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 전국민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분단·통일을 세계에 알리는 공간인 통일시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통일문화지구 조성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국제사회에 전파
-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확대

미래는 ...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실시

- 청소년 통일인식 향상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강화
 - 교과(도덕·사회·역사 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통일교육 실시(교육부, 시·도교육청, 통일부)
 -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주), 호국보훈의 달 등 계기 현장체험형 통일교육 실시
 -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교장(감) 자격연수시 통일교육 이수 의무화
- 지역사회 통일 체험학습 인프라 확충
 -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통일 체험학습이 가능한 통일관, 통일연수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 지역사회 통일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일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대학사회 건전한 통일 논의 확산 지원
 - 통일·북한 강좌 개설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통일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재외국민

-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
-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 우리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 및 편익 제고

복수국적 가능연령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국적법」 개정으로 지난 '11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
- 이후 동포사회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전면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미래는 ...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

-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복수국적 가능 연령을 우선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하향 조정
- 「국적법」 개정안 추진



맞춤형 동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

- 대한민국은 재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지위 향상과 영향력을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권익신장 및 기회확대를 지원하고 동포는 대한민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통해 모국에 기여하는 상호 윈윈관계를 구축해야 함
- 아울러 동포들이 실제 거주하는 권역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정책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동포정책을 추진해야 함

미래는 ...

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및 CIS, 기타지역 등 5대 권역별 맞춤형 동포 정책 추진

- 북미: ▲정치력 신장 ▲차세대 역량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 중국: ▲차세대 동포교육 강화 ▲재중 조선족-한인 협력 활성화
- 일본: ▲재일민단 미래발전 ▲차세대 민족교육 강화 등 정체성 함양
▲민단과 한인회 업무 연계 강화, 궁극적 통합 추진
- 러시아·CIS: ▲생활기반 취약 고려인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 기타: ▲현지 수요기반 지원

현지정착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 재외동포간, 국내외동포간, 온/오프라인, 직능별, 지역별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한인여성네트워크 등 기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함으로서 효율화 및 내실화 제고
 - 코리아넷, 스테디코리아, 한상넷 등 온라인을 통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간 교류 및 유대감 증진
- 미국 내 한인유권자 활동 지원 증대

미래는 ...

미래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 강화

- 한글학교 지원 등 우리말 및 역사·문화 교육 강화를 통해 차세대 민족정체성 유지
 - 재외동포 민족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연간 약 328억), 한글학교(연간 약 100억) 등을 지원
 - 우리말·역사·문화 상시학습이 가능한 스테디코리아 사이트 등 운영

현지체류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

- 재외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현장중심의 생활 밀착형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 확대
 -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기간 단축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확대
 - 사증면제 협정 확대 등
-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해외여행객 및 해외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은 여행사 및 관광업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보호와 불편함을 경감하는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기업인, 관광객 등 국외 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교통·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기업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사건사고가 연간 1만건을 돌파하였고, 테러·자연재해·항공기 사고 등 해외 위험요소도 증가 추세여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체류시 영사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
- 특히, '12년 이후 38명이 피살된 필리핀 등 우리 국민 대상사건이 다발하는 국가들에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 데스크」를 확대 설치할 필요
 - ※ 현재 2개국 3개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필리핀 2, 베트남 1)

미래는 ...

우리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 및 편의 제고

-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 영사콜센터 및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맞춤형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시행
 - 필리핀 등 기존 「코리안 데스크」 설치 국가에 파견 경찰관(현재 필리핀 2명)을 늘리고, 태국 등 피해 우려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등 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를 확대 추진
 - ※ 재외국민안전과 국외도피사범 추적 등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 한국인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터폴 기능)의 인력과 조직 보강
- 재외국민 편의증진 프로젝트 가동
 -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122개국) 수를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확대
 - 체류기간 확대 등 체류 지원,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등



차별과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정사회

-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가맹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 의무 부과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기업의 변칙 상속, 역외탈세 차단
- 공공재정 부정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 인사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원활화
-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국민체감의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하겠습니다

현재는 ...

- 서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여만개로 골목상권 형성
가맹점주 권리보호 대책 등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여 현장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
 -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체계의 추가적 개선 조치 필요
- *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 거래행위 등

미래는 ...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부당하게 거래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
 - 징벌적 배상금액의 상한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 고려, 3배 이내 규정
- ※ 현재 「하도급법」(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대리점법」 도입('15년)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현재는 ...

- 롯데 경영권분쟁에서 드러났듯 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발생, 해외 계열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가 없는 실정. 현행 공시제도의 보완 필요 (8.6. 당정협의 후속 조치)
- ※ 현행법 상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을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로 한정

현재는 ...

- 기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의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하여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의무화, FUI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법 보완 및 세정 강화와 함께 국가 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 탈세기법이 첨단·지능형으로 진화하는 등 이들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여 공평과세 확립 필요

미래는 ...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해외 계열사의 소유지분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공시 의무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
-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 명확화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미래는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기업의 변칙 상속, 역외탈세 차단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탈세제보포상금 제도 등 과세인프라 보강과 함께 빅데이터의 체계적 통합분석 기법 등 첨단 탈세 대응역량 강화
- 대기업주 및 고액 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세무 검증 등 세정 강화
-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역외탈세 근절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시 논의된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BEPS)」 관련 제도개선 추진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

- 복지 수요 증가, 행정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해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지출이 늘어나는 한편,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관행 또한 만연한 상황
- 현행 법령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예방 및 제재가 미비하여 공공재정 부정수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가 곤란

미래는 ...

공공재정 부정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15.6 국회 제출)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정이익과 이자를 전액 환수
 - 허위증빙 제출, 과다계상,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환수에 더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다만, 부주의·과실, 자진신고, 100만원 이하 소액 등의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고액·상습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표(3년간 3천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하고 2회 이상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

공공기관 인사청탁 근절하겠습니다

현재는 ...

- 사례 : 감사원이 '15년 1월~7월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47곳을 감사한 결과 14곳에서 인사 비리 적발
 - 부산00공사 : 특별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사내외의 청탁을 받은 인사팀장이 7급 계약직 3명을 특별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 등으로 전환시킴
 - 한국0000진흥원 : 채용자를 미리 정한 상태로 채용공고를 냄. 65명의 지원자 전원 불합격
 - 000공사 : 직원 인맥을 통해 입사 신청 받은 뒤, '12년~'14년 504명을 면접만으로 특채 등
-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필요

미래는 ...

인사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에 청탁자 정보(이름, 직책 등) 및 위반내용 공개 의무화
 - 명확하고 엄격한 후속 조치를 통한 인사관련 부정행위 사전예방 효과 및 인사청탁 근절을 통한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 기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근절로 투명성·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임금체불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현재는 ...

- 국가,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요물자 등의 구매에 따른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만 「국가계약법」 의무적용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으로 한 결과, 자체발주 계약의 경우 자의적 집행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
- * 「국가계약법」 의무적용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자산 1,000억원 이상 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 현재 200개 중 65개만 해당)
- **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 (국가)물품·용역 1억원 이상, 공사 30억원 이상 계약, (지자체)물품 단가계약, (공공기관) 21억원 이상 중기간 경쟁물품
- ***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06.1 개별 지자체 특성 반영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
-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계약법」 적용 확대,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미래는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65개) → 예산 250억원 이상(123개)
- *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 공공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무위탁하여 유착관계 등을 이용한 계약비리 차단(의무위탁대상 : 21억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단가계약 등 추가)
- *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현재는 ...

- '10년 이후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 2~3천억원 발생, 체불 근로자는 약 27~29만명 수준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많이 발생, 규모로는 100인 미만(1,241억, 269천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87.5%
-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근적인 폐습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소비 위축으로 국가경제에 부담



미래는 ...

임금체불 사업주 재재 강화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처리
 - 「근로기준법」을 개정, 부가금제(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지연이자제 확대(퇴직+재직근로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추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2천만 이하 과태료)
-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유통이 원활해집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

- 현재 납품 후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발주계약 후 납품 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금지급이 미미한 상황
- 납품 물량을 수주하더라도 초기 투입비용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가장 현실적이고 건전한 유통성 지원은 발주계약 베이스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현재는 ...

-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이 221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1차 기업 간 협약에 머물고 있어 영세한 2·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

* ('12년) 도입기업 77개 → ('15년) 도입기업 221개

〈성과공유제〉

*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함께 협력활동(원가 절감, 품질 개선, 신기술 개발 등)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거둔 성과(현금보상, 단가보상, 물량 확대 등)를 사전 계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나누는 제도

*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

미래는 ...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원활화

-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발주기업), 금융권(보증기관, 은행), 중소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납품 전 자금지원시스템 도입
 - 대기업 ↔ 협력업체 계약 체결시, 보증기관은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협력업체에 발급
 -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협력업체에 선금 지급(대출)
 - 협력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대기업은 은행에 협력업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
- 참여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참여유도

미래는 ...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여 '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500개로 확대
 - 대기업과 2·3차 기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정부 R&D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
- * 대기업-1차 기업의 성과공유제를 2·3차 기업까지 함께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를 1차뿐만 아니라 2·3차 기업과도 공유할 수 있는 모델
- 1차뿐만 아니라 2·3차 협력기업도 성과공유제에 적극 참여하여 원가 절감, 기술력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진심을 다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정치쇄신

- 국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
-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고, 윤리심사 강화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

-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오히려 실종되고, 국회가 국정 책임을 방기하는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으로 전락
- 국회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 개혁 시급

미래는 ...

국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

- 국회 선진화법 개정
 - 대의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확립, 국회운영을 정상화
 - 민생안정, 국정개혁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
 - 국회 파행, 국회의원 구속 등 의정활동 중단기간 세비 지급 금지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 무차별 폭로성 의혹 제기가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균형 있고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원입법의 생산성 제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강화, 무분별한 규제 증가 방지
 - 의원입법에 대한 Pay-go 원칙을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을 섬기는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재는 ...
- 국민의 뜻에 맞는 민고 말길 수 있는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함
 - 균림하는 정치의 폐단을 일소하고 섬기는 정치로 개혁하여 정치신뢰 회복 필요

미래는 ...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고, 윤리심사 강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선
 - 국회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의무 부여
 - 체포동의안 72시간 내 미표결시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
 - 체포동의안 표결방식을 기명방식으로 변경
-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 허위사실의 의도적 유포 및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적 이익 유도 등 부패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
-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 의원 징계안은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
 -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징계안을 60일 이내에 심사완료 하되,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도록 개선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습니다

- 현재는 ...
-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선거비리, 주민대표성 부족 등 문제로 '06.12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
 -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점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혁 필요

미래는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혁
 -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으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총선('16.4) 직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차원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를 구성, 대안 검토 및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도출
-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위한 TF 구성('16.4 총선 이후)
 - 전문가, 교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지방자치가 활발해지고 지방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 지방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가정과 학교 등 생활 주변의 치안 강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최근 복지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립도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엄정한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을 차단하고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환경 조성 필요

미래는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 ※ 경마('62년), 경륜·경정('94년), 소싸움경기('11년) 과세
 - 사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의 대대적인 정비
-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형평성 강화
 - 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② 지방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강화
 - ③ 지방재정 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구(지방회계통계센터) 운영 활성화
 - ④ 자치단체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도입 추진
 - ⑤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선
- 법 개정사항 :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

50만·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50만 이상·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비해 행정권한이 미흡하여 기존 특례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 인구집중, 교통, 주택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대도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대두

미래는 ...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 기능과 역량에 부합하는 대도시 특례 확대
 - 50만·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앙부처, 도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사무특례) 대폭 확대
 -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 및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행정·재정 운영특례를 마련
- 대도시의 명칭 및 지정기준 검토
 - 대도시 지정기준을 인구 외 면적기준도 적용 검토
- 법 개정사항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는 ...

- 우리나라는 국가총사무 중에서 자치사무 비율이 32%(‘13년 기준)로 중앙과 지방 권한의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현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중심으로 미이양된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치사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 필요

미래는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 지방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 이전 정부에서 지방이양 결정 후(‘00년~’12년) 아직까지 법령개정이 되지 않은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지방일괄이양법」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대상법률 및 사무 등 명시
 - 대상사무 : 20개 부처, 109개 법률, 633개 사무
-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법제화
 - 「지방일괄이양법」에 지방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수용성 및 실행력을 제고

지역사회의 안전 책임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하겠습니다

현재는 ...

- 최근 아동학대 등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 자치경찰 활동과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상담, 예방,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치안서비스 제공 필요

미래는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가정과 학교 등 생활 주변의 치안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
 -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방범·질서유지 등 자치경찰 사무로 적합한 주민 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발굴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외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과태료 징수 이관,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의 자치단체 귀속 등 증세 없는 방안 강구
- 도시 및 농어촌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광지 등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찰 인력을 적절히 운용해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법 제정사항 : 「자치경찰법」 제정



경쟁력을 살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듭니다

농어촌 경제활성화

-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재해 지원대책 마련
- 농촌지역에 복지시설 제공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
- 풍수해 및 가뭄 대비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융복합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활용가능성 제고 및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 FTA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 농수산물식품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발기반 정비 및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맞춤형 지원
- 농촌지역 빈집을 체험·복지·생산 등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력제 관리 강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 어촌·어항·수산시장 관광 명소화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직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전망 강화
- 어업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해양강국 건설

- 해운거래스 설립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해양환경 개선 및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
- 항만공간의 다기능 복합활용 지원 및 재정·민간투자 확대
- 노후여객선 신규건조 지원 및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 e-Navigation 및 선박평형수 기술 개발 선도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장치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재는 ...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률 증가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협하는 요인 증가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 소득 감소

미래는 ...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재해 지원대책 마련

- 농업재해보험 : 피해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도 보상하는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보장금액 선택 특약, 벼 미이앙 보장 등 다양화
 - 대상품목 및 과수종합위험보장을 확대하고 보장상품을 다양화
 - 기상재해와 수확량 감소를 연계하는 지수보험에 대한 연구 및 도입 검토
- 농업인안전보험 : 보장수준 상향, 대상 질병 추가 등 산재보험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보험료 우대 등 고령·영세농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 재해지원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시 농작물·가축에 발생한 피해를 포함
 - 현행 실거래가의 58% 수준인 복구지원 단가기준을 '20년까지 80% 수준까지 단계적 현실화
- 농업수입보장보험 :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농업수입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충
 - 기존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의한 수입손실까지 보장하는 폭넓은 농가 경영·소득안정제도 도입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현재는 ...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 필요
 - 농촌지역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 중심으로 삶의 질 여건이 취약한 계층 증가
 - 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시설 및 유치원 확대 필요
 - 농어촌 소외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여건 향상 필요

- 미래는 ...
- 농촌지역에 복지시설 제공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제도 정비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 농촌지역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추진
 - 농촌지역 내 공공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로 조성
 -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 소규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 여성농업인 출산시 인력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 확대
 -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확대
 - 재해 예방,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지원
 -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환경 개선

재해에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가뭄 등 기상재해상시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필요



- 미래는 ...
- 풍수해 및 가뭄 대비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풍수해대비 : 수리시설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 획기적 확대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 구축
 - 수리시설개보수 : 노후·기능부족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현대화
 - 배수개선 : 홍수시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의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영농피해 최소화
 - 가뭄대비 :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중소형 저수지 및 양수장 등 설치
 -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용수를 수리시설 미비로 인해 가뭄에 취약한 농업용수 부족지역으로 배분·공급
- * 4대강 다기능보의 풍부한 수자원을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하천수 활용사업 적극 추진

지역단위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지역의 집적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



미래는 ...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융복합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창업보육 지원으로 6차산업 핵심 경영체 육성
 - 벤처창업특화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로 창업 코칭, 시제품 생산, 자금, 기술 등 6차산업 창업 일괄 지원
 - 판로 지원 및 모태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
-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 스마트팜 보급 및 들녘경영체 확대로 생산성 및 수급조절 역량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로컬푸드 표준조례안 제정 등으로 안정적인 지역 내 소비기반 조성
 -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가공, 체험, 숙박 등 융복합 시설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상품 다양화, 편의성 제고 등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외국인 맞춤형 패키지 상품개발,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교통·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품질 제고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및 필요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의 필요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귀농귀촌희망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주택·농지·자금·기술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방안 마련 필요

미래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활용가능성 제고 및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 농어업자금지원을 위한 부분보증비율 확대(현행 : 85% → 90%) 및 우대보증 확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보증료를 인하(현행 : 3단계, 최대 1.2% → 5단계, 최대 1.0%)
- 귀농 창업자금 규모를 확대('16년 1,500억 → '20년 2,000억)하고, 귀농인 지원 대상 완화(예비귀농인 : 도시거주자 2년 이내 농지 선취득자 포함)
- 주택자금 금리인하('15년 : 2.7% → '16년 : 2% → '20년 : 1.5%) 추진 및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
- 농촌주택 소유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 귀농·귀촌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50개 지자체에 3년간 6억원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 확대
 -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정착금·이주비·집수리비 지원, 농지·빈집 안내, 멘토 지정 운영, 영농교육 등
- 입주와 함께 영농기술 등 농업·농촌 교육을 받는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농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최소 5년)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식품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는 ...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가경영여건 악화

현재는 ...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농수산물식품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지원 필요

미래는 ... FTA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 TPP, RCEP 등 대외협상 추진시 농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선대책 마련
- 농가의 신청을 받아 수입 농산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 선정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및 이행기간 연장 등
 -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현행: 95% → 개선: 100%)
 - 시행기간 연장(현행: '21년 → 개선: '25년)
 -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익제기 절차 신설
- FTA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도농 및 농업과 기업 간 상생분위기 확산
 - 상생기금 조성 및 여야정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조속히 개정
 -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상생기금으로 농어촌 의료·문화지원 사업,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주거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

미래는 ... 농수산물식품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인가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농식품분야 전략 품목 개발 및 글로벌 브랜드화 촉진
 - 전국 지역별 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현지인 선호 품종 재배·관리
 - 수출전문단지에 공동선별장·수출기반 생산시설, 권역별로 공동물류센터 및 가공시설 지원
 - 품목별 주산지별 조직화·규모화,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상품화 등 적극 지원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국내 생산기업 간 전략적 제휴,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추진
- 中 청도물류기지 등 국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냉장·냉동 운송차량으로 연계하여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을 구축
- 고부가가치 수산물 개발 위해 R&D 투자 확대 및 수산물 거점단지 8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지역별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로 연결
- 수산물 수출 거점 확보를 위해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및 수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활어운송용 컨테이너도 지속 제작 보급
- 자금이 부족한 수산물 수출·가공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융지원 강화 추진
- 농수산물 국가통합 브랜드(K-food, K-fish)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실시 (박람회 및 현지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및 한류연계 홍보관 운영)
- 인삼 수출활성화 및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삼산업법」 개정 추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위해 술 품질인증 기준 강화

밭기반을 정비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밭농업이 쌀 생산 감소 등으로 주요 소득원으로 부각, 고품질 및 안전한 밭작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밭기반 정비 실적이 저조하여 밭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실정
 -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이며 노동집약적이나, 중산간지 분산 입지 및 생산기반 미흡으로 기계화 및 재배규모 확대에 한계와 가격변동 불안 존재

미래는 ... 밭기반 정비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맞춤형 지원

-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 정비 확대 및 중앙 정부의 밭 기반 정비 예산 지원 방안 강구
 - 공동경영체의 고품질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주산지 기반정비 및 맞춤형 기계화 공급체계 구축
 - 작업 단계별 발전용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한 책임운영권을 부여하여 일관기계화 생산집적화단지 조성
- 밭작물별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품질 경쟁력을 갖춘 생산전담 및 유통(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 육성
 - 품질관리 및 출하조절 계획 수립·이행을 점검하는 농가 조직체(공동경영체)에 대한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
- 유통 계열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수출시장 개척, 부가가치 창출 및 직거래 등 판로 다양화로 소득 제고
 - 안정적 고품질 물량 확보로 소비자가 찾는 파워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통합마케팅 여건 조성

농촌 빈집을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 현재는 ...
- 농촌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농촌마을 주거환경 훼손은 물론 빈집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발생 등으로 살터로서 농촌마을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둔화
 - 소유주의 추가비용 부담 및 지가 하락 등 경제적 요인으로 빈집 철거 동의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지자체 직권 철거시 행·재정적 부담 과중

미래는 ... 농촌지역 빈집을 체험·복지·생산 등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 빈집을 활용형과 제거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립
 - 활용형 :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매, 체재형 가족농장, 농산물 저장 창고, 공동장비 창고 등 지역활성자원화 시책 개발
 - 제거형 : 철거비용 재정지원 현실화, 직권 정비시 감정평가 및 보상비 지급 제외 등 간소화 절차로 폐가정비 활성화
- 농촌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 실시 및 선정된 시범사업 적극지원
 - 마을카페, 도서관, 공동홈, 경로회관, 창업공간, 주차장 등 생산, 복지 공간으로 활용
-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정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자 정착 촉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효과 기대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어촌·어항을 연안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수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 중이지만 이력제는 자율참여 형식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미흡하며 원산지 표시위반 지속 발생

현재는 ... ■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딘 소득원 개발로 수익과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 시급

미래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력제 관리 강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 대중성 어종,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산물 이력제 중점추진 품목으로 추가 지정·관리하고 인센티브 발굴로 제도 활성화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단속 강화
■ 수산물 위생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위판장,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시설 개선·건설 및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
■ 내륙지(충북·전북·강원·경북 등 4개소)에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무소 신설 추진

미래는 ... **어촌·어항·수산시장 관광 명소화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수산기능 중심의 국가어항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화어항으로 개발 및 어촌 경제중심지로 육성
- 기존 어항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관광·휴양·마리나·낚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다기능어항 개발(10개항, '16년~'22년)
- 어항의 자연경관과 어촌마을의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국민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아름다운어항 개발(4개항, '16년~'22년)
■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지원, 어업유산 관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시 (~'18년), 광역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어촌 관광활성화
■ 자갈치시장의 해양수산복합공간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노량진수산물시장 복합관광단지 개발로 수산시장 관광명소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하겠습니다

어업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현재는 ...
- 과도한 어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 지속 감소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한·중 정상회담('13.6, '14.7) 및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15.10) 후속조치 추진 필요

- 현재는 ...
- 한·중 FTA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가소득과 경영여건 불안정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섬)에만 어가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도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미래는 ...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 사라진 어종 살리기 등 수산자원 회복의 기반 조성
 - 명태 등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바다숲 등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해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
- 수산자원조사선 확보 및 휴어기 정책보험 도입 검토
 - 수산자원 정밀조사 위해 1,000톤급 이상 대형조사선 적기 확보
 - 휴어기 기간 동안 어업비용을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휴어기 정책보험 도입 추진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 전자어업허가증,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등 대책 강력 추진 및 어업지도선 등 단속장비 대폭 확충
 - 무허가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인상(2억원 → 3억원)하고 IUU어업 통제시스템 구축 및 단속역량 강화

미래는 ...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직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전망 강화**

- 생산자 총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설정한 기준 수입까지의 차액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단가를 '20년까지 단계적으로 70만원으로 인상 및 지급 대상 도서 확대 추진
-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15년, 21개 → '17년, 27개)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어업인들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접지불제 지원
- 어선장비 무상점검 지원사업(50개소)의 개소당 지원단가 인상

어업인 복지 확충으로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현재는 ...
- 고령·여성 어업인 등 취약계층 및 낙도지역 등 정주여건 취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복지 확충 필요
 - 연안어업(10톤 미만어선)은 해양사고의 사각지대이며 영세성으로 인해 어선 현대화 및 어선원 보험 가입 미흡
 - 도서지역은 기상 악화 및 운송 물량 부족시 생필품 운송 지연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큰 상황

- 미래는 ...
- 어업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취약어가 인력지원제도 확대, 낙도지역 어업인의 어작업 환경 개선 위해 다목적 어업인 안전쉼터 20개소 조성
 - 비용 절감, 복지·안전 중심의 소형 연안어선 현대화 추진, 노후기관·장비 교체, 자동 소화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속 보급
 -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18년 이후 3톤 이상)
 - 여객선 및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을 연차별로 개선
 - 도서지역 생필품의 안정적 운송을 위한 선박 확보 및 해상운송비 지원('해운법' 개정)

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해운시장 침체 장기화 및 우리나라 선사들의 해운시장 정보 부족, 위험관리 수단 부재로 해운산업의 위기 심화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미흡한 노후보장 제도 등으로 선원의 승선기피 가속화



- 미래는 ...
- 해운거래소 설립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해운산업 위기 극복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 초기에는 아시아 해운시장에 특화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운기업의 투자 결정 지원
 -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같이 시황분석, 운임선도거래(FFA) 등 부가가치 창출로 독자 운영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해운법' 개정)
 - 우수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장기승선 유도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현행 「선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원 퇴직급여(연간 급여의 1/12, 8.3%)를 연금 재원으로 전환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 지원 추진('선원법' 개정)
 - 해운물류산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부산 용당), 서남권 여객선 종합비상훈련장(목포 남항), 승선실습선 대체건조 추진

깨끗하고 재해에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산업 고도화 및 경제 발전 등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 및 해역 유입 심화
 - 연안 개발에 따른 연안침식 증가로 해양환경의 오염·훼손 및 주민 정주여건 위협

- 미래는 ...
- 해양환경 개선 및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
-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현행 3개소(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에서 '19년까지 5개소(울산연안 '17년, 광양만 '19년)로 확대 시행
 - 전국연안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추진
 - 훼손(오염)된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에 취약한 연안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응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 및 연안정비사업 확대 실시
 - 「해양에서의 쓰레기 및 그 밖에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6년) 및 갯벌복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7년) 추진

항만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여 물류기업 등에 부지를 임대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창고업 운영으로 고용 창출 효과 미흡
 - 항만시설(부두) 사용이 물류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유향화된 항만시설에 해양 산업을 집적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미흡

- 미래는 ...
- 항만공간의 다기능 복합활용 지원 및 재정·민간투자 확대**
-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 및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 유치에 위해 1종 항만배후 단지에 대하여 민간개발 및 분양이 가능토록 「항만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항 배후단지 일부(부산, 인천, 평택·당진항)에 대하여 시범사업 시행 후 확대
 - 노후·유향화된 항만, 준설토 매립장 등을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다기능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 지역별 주요 항만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수출기반 증대 및 경기진작 도모
 - 신규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향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 하도록 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법」 조속 제정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선박운항 안전을 제고하고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여객선의 시급한 대체가 필요하나 연안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절실
 - 소규모 도서지역 기항지의 열악한 접안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필요

- 현재는 ...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국제 해사규제인 e-Navigation 도입을 준비 중이며,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기술 선도국은 관련 핵심기술 연구 개발 추진 중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생태계 교란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04년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 '17년 발효 예정
 - 협약 발효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운항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의무설치



- 미래는 ...
- 노후여객선 신규건조 지원 및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 노후 여객선 신규건조 지원 위해 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
 - 노후 여객선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연안여객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부 자금 출자를 포함한 여객선현대화펀드를 조성하고, 선사 자부담 및 금융기관 대출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
 - 선박 대체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1~2척 건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확충으로 안전 강화
 - 열악한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을 연차별로 개선

- 미래는 ...
- e-Navigation 및 선박평형수 기술 개발 선도**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 적극 추진
 - 핵심기술·국제표준선도기술 개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체계 등 구축(「해양안전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및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이동형 선박평형수 시험설비 구축 등 기술 개발
 - 현 기준보다 1천배 강화된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제품 개발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값 5000원



9 788996 982913

ISBN 978-89-969829-1-3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주프린텍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83(출판단지내) Tel. 070-8755-7801